

자본주의와 한국경제: 과제와 진로

박 영 철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석좌교수)

1. 머리말

자본주의 시장 체제¹⁾가 수술대에 오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자 그 원인을 자본주의의 원죄와 신자유주의의 폐해에서 찾으려는 글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자본주의 위기론자들은 강력하고 효율적인 정부가 등장하여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눈을 찢고 찾아보아도 그렇게 현명한 정부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존재하지도 않거니와 앞으로 나타나리라는 전망도 없다. 미국, 일본, EU회원국들의 리더십 부재로 인한 정책의 혼란은 위험수위에 오르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회의와 불만은 공생발전,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의 확충, 동반성장, 그리고 재벌개혁으로 표현되는 다양한 혁신의 요구로 분출되고 있다. 정치권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시민사회의 경제현황에 대한 불만에 편승하여 시장경제의 개선을 위한 광범위한 개혁을 약속하고 있다.²⁾

신자유주의의 폐해는 (i) 금융의 자유화 개방으로 시장의 경기 조절기능의 약화, (ii) 빈부격차 확대와 양극화, 그리고 (iii) 재벌의 팽창에 따른 경제력 집중으로 요약 할 수 있다.³⁾ 진보진영은

1) 이 글에서는 편의상 자본주의, 자본주의 시장체제, 자유 시장경제를 동의어로 사용한다.

2) 경제민주화는 논자에 따라 그 뜻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공평하며, 합리적인 경제사회 질서의 확립, 그리고 이러한 공정한 경제 질서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정치 개혁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런 뜻에서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체제는 물론 정치를 포함하는 사회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개혁을 의미한다.

3) 김병권(2012) 참조. 김상조(2012, p.186)는 재벌이 생산성 향상에 기반하여 국내외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달성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시장지배력 남용의 결과이거나 이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경제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깨뜨릴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이들 부작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 노동자, 농민 등 상대적 약자들은 희망을 잃고 있으나 재벌들은 법과 정의를 무시하면서 이익을 독식하고 지대추구(rent seeking)를 일삼는 등 사회적인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재벌의 횡포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정부는 물론 사회전체가 재벌의 경제력 남용을 억제하거나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외환위기 이전의 한국 자본주의 체제는 정부가 자원 배분과 경제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부 주도형 체제로 널리 알려져 있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추진한 경제의 자유화는 정부주도를 지양하여 경제 운영을 시장에 의존하는 시장 중심의 자본주의로 체제를 전환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세계화의 과정에서 분배구조가 악화 되었고 정부의 견제가 약화된 상황에서 재벌은 새로운 사회 혹은 시장 권력으로 군림하게 되어 정부를 비롯한 여러 주체간의 힘의 균형이 와해되었다. 즉 재벌로 경제력이 집중되자, 자유 시장 제도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경제는 재벌 주도형으로 바뀌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좀 더 속된 표현을 빌리자면 한국은 재벌공화국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벌의 팽창과 함께 금융의 자유화와 개방도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예상과는 달리 금융자유화는 경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켰고 소득분배구조의 악화에도 일조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자본주의 시장 체제의 개혁은 분배와 복지의 개선, 재벌 주도 편향의 억제와 금융부문의 건전성 강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개혁방안으로 이 논문은 (i) 금융시스템의 단순화, (ii) 재원조달이 가능한 범위내의 절도 있는 복지정책, (iii)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업, 언론, 비정부기구(NGO)와 기업의 이해당사자 간의 책임영역 조정 및 합의의 도출, (iv) 상위 대기업 집단을 견제할 수 있는 사회적인 감시망 구축, (v) 대기업집단의 자체적인 개혁을 제시한다.

시장 경제의 개혁이 성공하려면, 개혁의 범위와 접근방법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그러자면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등장해야 하고, 개혁의 추진체가 될 정부는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해야한다. 정부에 대한 믿음이 미흡하거나 정부실패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는 한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80-90년대의 정부실패사례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으리라는 아무런 보장도 없다.

과거의 경험을 보면 선·후진국을 가릴 것 없이 일단 경기가 활성화되어 실업이 줄고 경제가 안정을 되찾으면 자본주의 개혁에 대한 열기도 사라지게 된다. 자본주의의 혁신을 주도하는 진보진영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그보다는 시장의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는 등 경제운영에 있어서 정부개입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장의 실패를 완화하고 도덕성을 강화하는 등 체제의 보완에 역점을 두고 있다.

있음을 강조한다.

이 글의 2절은 자유시장경제의 구조적인 결함을 다룬다. 3절은 외환위기 이후 재벌의 성장 패턴과 구조적 변화를, 4절은 기존통계와 연구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분배의 불균등·양극화 정도의 추이와 재벌이 빈부격차에 미친 영향을 검토한다. 5, 6절은 금융부문, 분배구조와 재벌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7절은 한국의 자본주의 진로를 제시하며 8절은 맺음말로 결론을 내린다.

2. 자유시장경제의 구조적 결함

1) 자본주의의 강인성과 신축성

자본주의는 그 기원이 중세로까지 올라가는 오랜 역사의 산물로서 그 동안 끊임없는 공격과 혁신의 대상이 되어왔다. 18세기 중엽부터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자본주의는 그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원초적 도전을 받는다. 산업화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근로계층의 참상이 부각되면서 자본주의의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은 사회주의·공산주의 탄생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1916년 구소련에 공산주의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그 후 1929년의 대공황으로 시장경제의 자기조절기능이 마비되자 정부의 시장개입을 합리화하고 확대하는 혼합경제제도(mixed economy)가 등장한다. 현재,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경제는 정부 역할에 있어서 차이는 있으나 모두 혼합경제제도의 넓은 범주에 속한다. 2차 대전 이후 자본주의를 수정·보완하려는 노력이 일반대중의 호응을 얻어 탄력을 받게 되자 복지과 공평한 분배 등 사회정의의 강조하는 여러 형태의 사회적 시장 경제가 유럽에 정착하게 된다.

1991년 구소련 경제의 붕괴로 2차 대전 종전이후 50년이 넘게 지속되었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과 경쟁은 자본주의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신자유주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1990년대 초반부터 안정속의 호황이 지속되자 선·후진국 모두 경기변동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게 된다. 자유 시장 경제 체제는 다시 전성기를 맞게 된다.

그러나 이런 전성기도 얼마 가지 못한 것이 2007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회복단계에 들어가기도 전에 유럽의 재정위기가 겹치면서 세계경제는 깊은 불황의 늪에 빠져 들고 있다. 예상했던 대로 시장경제의 경기 순환 조절 능력에 대한 회의가 되살아나고 있다. 여기에 설상가상 격으로 대부분의 선·후진국들에서 소득분배의 불균등 악화로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나 그 어느 정부도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진보진영은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자본주의의 모순과 구조적인 결함에서 찾고 있다.

진보경제학자로 알려진 스티그리츠(Stiglitz, 2012)는 자본주의가 위기를 맞게 된 원인을 시장의 실패와(market failure)와 도덕성을 상실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도외시하는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결함에서 찾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스티그리츠의 주장이 한국의 경제 민주화 논의

의 이론적·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절에서는 그의 주장을 요약하여 한국에서 일고 있는 경제 민주화의 배경을 알아본다.

2) 자본주의와 시장실패

미국과 유럽의 경우, 시장의 실패는 금융부문에서 가장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융매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은행을 비롯한 비 은행 금융기관은 경기 친화적으로(procyclicality) 대출과 투자를 조절하여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 금융시장에서 버블형성 되었다가 소멸(boom-bust)되는 등 경기순환 진폭을 확대시키고 있다. 버블의 소멸은 경제를 침체 심지어는 파국국면으로까지 몰고 갈 수 있다.

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비 은행 금융기관은 불공정할 뿐 아니라 위법적인 대출 조건을 강요하고 있으며 리스크를 제대로 판별할 수도 없는 다양한 사기성 파생상품을 판매하여 고객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방만한 자산운영으로 과도하게 리스크에 노출되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다.

1980년대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온 금융자유화와 개방화는 두 가지 변화를 가져왔다. 그 하나는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금융시장의 과점화 현상이었고, 다른 하나는 금융감독과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었다.

금융감독 당국은 시장 간의 벽을 허물어 금융기관간의 상호진출을 허용하였으며 심지어는 건전성 감독마저 외면하여 금융감독의 사각지대가 확대되었다.

금융기관과 시장참여자들은 이 사각지대에서 자유화를 남용하기 시작하였다. 금융자유화가 정보화 데이터 처리기술의 혁신과 결합되면서 금융기관은 대형화·다각화에 성공하여야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로 소수의 대형금융 기관들이 개별 금융시장을 과점하는 부작용이 나타났으며, 감독의 허점을 이용하여 투기를 일삼아 금융기관들의 경영진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등 상위 1%의 소득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는 폐해가 발생하였다. 자연히 분배의 불균등이 악화되었다. 더구나 이들 대형 금융기관은 파산하는 경우 경제전체의 안정이 위협을 받을 정도로 그 규모가 비대해져 경영이 실패하는 경우 정부가 구제할 수밖에 없는 대마불사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고 이에 따른 도덕적 해이는 도를 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3) 신자유주의와 도덕성의 상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경쟁을 통해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제도이나 기업의 이익과 개인 행복의 추구를 위한 수단과 방법의 도덕성은 위법행위가 아닌 한 문제 삼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경제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의 규범적인 문제, 예를 들어 소득분배 불균등은 사회적 합의로 해결해야하는 영역 밖의 문제로 도외시 하는 결합이 있다.

그러나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심화되면 불균등은 시장의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 시장이란 법과

규정 그리고 여러 사회제도에 따라 골격이 형성되는 하나의 시스템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고 소득층은 얼마든지 경제력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제도를 바꾸어 나갈 수 있다. 바로 이런 경제력의 남용으로 1%로 지칭되는 고 소득층은 새로운 부를 창출하기 보다는 남이 소유하고 있는 기존의 부를 뺏아 오는 비도덕적 행위, 즉 지대추구(rent seeking)에 몰두하여 경제력이 편중되면 시장의 경쟁질서가 왜곡되고, 그 결과로 시장의 수요공급의 원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스티그리츠는 미국의 경우 이러한 지대추구행위가 소득 불균등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 소득층의 경제력이 증가하면 공정한 경쟁체제가 형성될 수 없다. 1%의 고 소득층은 정부, 언론, 법조계 그리고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일인일표”의 민주주의의 원칙마저 와해될 수 있다. 더구나 시장만능주의는 상품화 할 수 없는 상품과 서비스, 예를 들어 인간장기의 판매, 기어 입학제, 탄소배출권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사회적인 도덕성의 타락은 물론 소득불균등으로부터 오는 저 소득층의 고통을 가중시키게 된다(Sandel, 2011, 2012).

스티글리치(Stiglitz, 2012)는 고도성장경제에서 소득분배의 불균형의 심화는 불가피하다는 과거의 연구결과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불균등이 악화되는 경우 실업이 늘고 경제가 불안정해지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신자유주의 실패가 입증된 이상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폭넓은 시장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3. 재벌 비대와 경제력 집중

대기업 집단 혹은 재벌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기업의 지배구조가 아니다. 유사한 형태의 대기업 집단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을 제외한 선·후진국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 집단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고 경제력을 남용하여 시장의 경쟁질서를 왜곡하고 경제의 안정 기반마저 교란하는 등의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배구조이다(Morck, 2009).

세계적으로는 단일 기업으로서 매출액이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대기업들은 여러 나라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어, 2011년 기준으로 네덜란드의 Royal Dutch Shell은 56%, 스위스의 Glencore는 29%, 노르웨이의 Statoil은 24%, 그리고 핀란드의 Nokia는 20%를 차지하고 있다(*The Economist August 25-31, 2012*). 이에 반해 삼성 그룹 전체의 매출액은 22%(비 보험 금융 18%)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과는 달리 이들 외국의 대기업들은 별다른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다. 우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있고, 소유가 넓게 분산되어 있으며 비도덕적인 행위가 용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30대 대기업 집단이 총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수출 의존적인 경제 발전의 주역을 맡아왔다는 사실이다.

1) 규모의 팽창

1997-98년의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는 대폭적인 재벌개혁을 추진하여 16개의 크고 작은 재벌이 문을 닫았으며, 퇴출을 면한 재벌들도 부채비율을 줄이고, 새로운 지배구조를 도입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하는 혁신의 대상이 되었다. 재벌개혁은 무엇보다도 문어발식 경영을 지양하여 전문화 하도록 사업과 투자를 조정하고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경영을 합리화 하는데 주력하였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재벌은 정부와의 유착으로 여러 형태의 보조와 보호를 받아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졌고, 사업의 다각화·대형화를 무리하게 추진하여 부채비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 외환위기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그 후 추진된 경제의 자유화·개방화는 이러한 정경 유착의 고리를 절단하여 시장 규율에 의한 재벌의 성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현재 재벌은 다시 한 번 사회적 지탄과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동안 개혁의 성과나 개혁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정책적인 과오를 분석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진보진영과 정치권의 시각은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경제 자유화와 개방으로 재벌이 비대해졌고 그 결과로 중소기업 부문이 축소되고, 소득불균등이 심화되고, 재벌의 비도덕적인 행태가 만연되어 계층 간의 갈등과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재벌을 이미 오래 전에 사라진 공룡에 비유하고 있다. 공룡이 초식동물을 위한 풀과 나무를 다 먹어치워서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로 재벌들도 중소기업 업종과 중소기업 상인들을 궤멸시켜 공룡처럼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한다.⁴⁾

그러면 외환위기 이후 지난 15년 동안 재벌은 어느 정도 비대해졌는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여 사업을 늘려 왔는가?

(1) 계열사 증가

공정거래 위원회가 발표하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재벌 즉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의 수는 2012년 현재 63개이며 산하 기업 수는 1,831개이다(<표 1> 참조). 2009년 총출제가 폐지된 후 2012년 4월까지의 기간 중 63대 재벌의 계열 기업 수는 1,137개로부터 1,831개로 증가하였으며 신설 계열사 694개중 30.8%인 188개사가 30대 재벌에 속한다. 대부분의 신설계열사는 하위 재벌이 설립하였다(<표 2> 참조).

4) 김병권(2012)는 김영환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고 있다.

<표 1> 연도별 기업집단 지정기준 및 지정현황

(단위: 개)

연도	집단수	계열사수			평균 계열사 수			기준
		총수	비금융보험	금융보험	총수	비금융보험	금융보험	
1987	32	509			15.9			자산총액 4,000억원이상
1988	40	608			15.2			
1989	43	673			15.7			
1990	53	798			15.1			
1991	61	933			15.3			
1992	78	1,056			13.5			
1993	30	604			20.1			자산순위기준 30대기업
1994		616			20.5			
1995		623			20.8			
1996		669			22.3			
1997		819			27.3			
1998		804			26.8			
1999		686			22.9			
2000	30	544			18.1			30대기업집단
2001		624			20.8			
2002	43	704	626	78	16.4	14.6	1.8	자산총액 2조원이상
2003	49	841	756	85	17.2	15.4	1.7	
2004	51	884	804	80	17.3	15.8	1.6	
2005	55	968	900	68	17.6	16.4	1.2	
2006	59	1,117	1,048	69	18.9	17.8	1.2	
2007	62	1,196	1,118	78	19.3	18.0	1.3	
2008	79	1,680	1,570	110	21.3	19.9	1.4	
2009	48	1,137	1,055	82	23.7	22.0	1.7	자산총액 5조원이상
2010	53	1,264	1,166	98	23.8	22.0	1.8	
2011	55	1,554	1,418	136	28.3	25.8	2.5	
2012	63	1,831	1,666	165	29.1	26.4	2.6	

주: 1) 공정거래위원회는 1993~2001년의 기간 동안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합계 순위 30위까지 기업집단을 지정하였으나, 2002년부터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합계가 5조원이상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과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합계가 2조원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였고, 2008. 7.1일부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자산총액합계 기준도 5조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09.3.25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에 따라 현재는 자산총액 5조원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 지정하고 있음.

2) 자산총액은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보험업 영위회사인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신설 회사인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 납입자본금)을 말하며, 금융보험사의 경우는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아니라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을 자산으로 의제(공정자산)하여 계산된 것임. 또한 금융보험사가 지배하는 기업집단, 금융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등은 자산기준이 되더라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63개 지정」,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2.4.13, p.2.

<표 2> 기업집단 유형별 계열회사 수 추이

단위: 개 (전체 대상)

year	전체 기업집단	민간 기업집단					총수없음	공기업
			총수있음	4대	10대	30대		
2002	704	674	640	201	312	630	34	30
2003	841	815	741	198	322	674	74	26
2004	884	862	772	196	330	675	90	22
2005	968	935	852	178	346	709	83	33
2006	1,117	1,083	996	185	359	718	87	34
2007	1,196	1,156	1,011	183	379	766	145	40
2008	1,680	1,604	1,414	195	426	851	190	76
2009	1,137	1,096	984	233	473	970	112	41
2010	1,264	1,222	1,085	237	493	975	137	42
2011	1,554	1,512	1,364	286	581	1,102	148	42
2012	1,831	1,740	1,565	294	592	1,194	175	91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진단정보포털 오픈니(<http://groupopni.ftc.go.kr/>).

이와는 대조적으로 동일 기간 중 금융·보험 계열사의 수는 2009년의 82개사로부터 2012년에는 배가 넘는 162개사로 늘어났다(<표 3> 참조). 83개 신규 계열사 중 68.7%인 57개 사는 30대 재벌이 신설하였다. 즉, 총출제가 폐지된 후 30대 재벌의 금융업으로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표 3> 기업집단 유형별 계열회사 수 추이(금융보험회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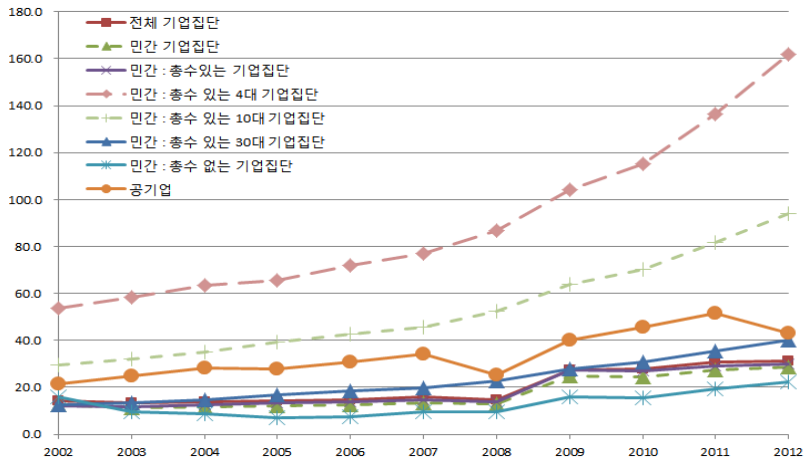
단위: 개 (전체 대상)

year	전체 기업집단	민간 기업집단					총수없음	공기업
			총수있음	4대	10대	30대		
2002	78	77	76	23	38	75	1	1
2003	85	84	83	23	41	81	1	1
2004	80	79	77	19	35	75	2	1
2005	68	67	66	15	28	62	1	1
2006	69	68	68	14	28	56	0	1
2007	78	76	73	13	28	55	3	2
2008	110	103	100	14	29	59	3	7
2009	82	80	78	15	30	66	2	2
2010	98	97	94	15	28	57	3	1
2011	136	135	131	16	46	81	4	1
2012	165	148	138	18	47	102	10	17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진단정보포털 오픈니(<http://groupopni.ftc.go.kr/>).

<그림 1> 기업집단 유형별 평균 자산규모 추이

(단위: 조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진단정보포탈 오픈니(<http://groupopni.ftc.go.kr/>).

<표 4> 기업집단 유형별 자산규모 추이

단위: 조원 (총액 기준)

year	전체 기업집단	민간 기업집단						공기업
			총수있음	4대	10대	30대	총수없음	
2002	611	438	374	215	297	370	64	173
2003	652	478	410	234	322	399	69	174
2004	696	526	449	253	352	436	77	170
2005	778	584	522	262	393	499	62	194
2006	873	657	584	287	427	550	73	216
2007	980	739	626	308	457	588	113	241
2008	1,162	883	757	348	526	681	126	278
2009	1,311	989	845	416	639	839	144	322
2010	1,472	1,106	951	460	703	924	155	366
2011	1,691	1,279	1,106	545	816	1,059	172	412
2012	1,978	1,461	1,283	648	940	1,205	178	516

주: 2011년까지는 국내회계기준(K-GAAP)을 따른 반면, 2012년부터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하여 산정된 것임. 유형별 평균은 대상 기업집단의 평균 자산규모를 말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진단정보포탈 오픈니(<http://groupopni.ftc.go.kr/>).

(2) 자산규모

2002~2008년 기간 중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의 자산규모는 두배로 증

가 하였으나 4대의 경우는 1.6 배에 그쳐 4대 재벌의 자산비중은 2002년의 35%로부터 2008년에는 30%로 하락하였다(<표 4> 참조).⁵⁾

계열 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총출제가 폐지된 2009~2012년 3년 동안 자산규모 5조 이상 민간 대기업집단의 자산은 1.5배나 증가하였다. 재벌들의 평균 자산규모의 추이를 보면(<그림 1> 참조), 총수가 있는 4대와 10대 재벌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3) 매출액과 부가가치

비 금융 매출액⁶⁾을 기준으로 할 때, 2002~2011년 기간 중 4대 재벌은 2.1배, 30대는 2.3배의 성장을 기록했다. 동일 기간 중 명목GDP의 증가는 1.8배에 그치고 있다.⁷⁾ 2002년 4대(30대) 재벌의 비 금융 총매출액은 215(370)조원으로 명목GDP의 38.2%(59.5)였으나, 2011년에는 44.6%(75.1)로 크게 증가하였다. 즉, 5~30대 재벌이 4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사업을 확장해왔다(<표 5> 참조).

<표 5> 기업집단 유형별 매출액 추이(비금융보험회사)

단위: 조원 (총액 기준)

year	전체 기업집단	민간 기업집단						공기업
			총수있음	4대	10대	30대	총수없음	
2001	510	454	410	261	347	407	44	56
2002	558	500	451	292	372	441	49	58
2003	520	461	402	257	320	390	59	59
2004	627	561	514	287	400	494	47	65
2005	697	625	567	308	431	539	58	72
2006	762	683	585	326	443	556	98	80
2007	860	767	661	346	480	611	105	93
2008	1,010	900	761	427	600	761	139	110
2009	1,021	924	783	456	621	772	141	97
2010	1,244	1,128	960	552	756	936	168	117
2011	1,461	1,313	1,126	640	881	1,078	187	148

주: 2010년까지는 국내회계기준(K-GAAP)을 따른 반면, 2011년부터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하여 산정된 것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보포털 오피니(<http://groupopni.ftc.go.kr/>).

5) 비금융보험회사 대상 기업집단 유형별 부채규모,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추이에 대해서는 <부표 23>~<부표 25>를 참조하기 바란다.

6) 연도별 대기업 기업집단의 매출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내역을 발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가리킨다. 따라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매출액은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시점보다 1년 이전 연도를 대상으로 구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임.

7) 2001~2011년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 명목GDP는 651조원에서 1,237조원으로 585.7조원 증가함으로써 같은 기간 동안 1.8배 늘어났다.

위형량·김우찬(2011)은 위에서 추정한 매출액과 계열사 수의 증가를 근거로 지난 10년 간 상위재벌로의 경제력이 더 집중되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김주훈(2012)과 황인학은 중소기업청과 통계청의 자료를 이용하여, 중소기업들도 30대 이하 재벌들을 포함하는 종업원 300인 이상의 대기업들과 같은 비율로 매출을 늘려왔기 때문에 30대 재벌에 경제력이 집중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황인학(2012)에 따르면 10(30)대의 매출액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의 총 매출액으로 나누어 산정한 집중도는 2000년에는 37%(44%)를 상회하였으나, 2004~2010 기간 중에는 평균치로 26%(35%)로 하락하였다.

김주훈(2012)은 1990~2009 기간 중 제조업 출하액과 부가가치 중 대기업(300인 이상)과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에는 커다란 차이가 없어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빨리 성장하고 있다는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고 한다.

중소기업청 통계인 제조업의 생산액(부가가치)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비중은 1990년 42.7%(44.3%)에서 2009년 47%(50.5%)로 증가했다. 동일기간 중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의 종사자 비중은 38.3%에서 23.2%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생산액과 부가가치도 병행하여 하락했다. 2009년 이후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변하지 않았으나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 군에 속하는 재벌의 비중이 상승하여 대기업 집단으로 경제력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좀 더 상세히 분석하기 위해 대기업 집단 유형별 명목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을 추산해 본 결과 총수가 있는 30대 민간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할 때 명목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은 2001년 23.0%에서 2011년 26.2%로 3.2pt 커졌다. 구체적으로 30대 민간기업 집단의 명목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은 2007년까지는 낮아지는 추이를 나타내다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과 비교할 때 이명박 정부에 이르러 30대 재벌, 나아가 4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다소 심화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증거로 볼 수 있다(<부록 1> 참조). 4대재벌의 비중은 2001년 14.8%로부터 하락하다가 2008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11년에는 15.5%를 기록하고 있다.

재벌로의 경제력집중과 관련하여 종업원 300명 이상의 대기업집단 내부에서는 규모별 기업 간의 비중과 관련하여 주목할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부표 6과 7을 보면, 광업·제조업 부문에서 1999~2009 기간 중 300명 미만 중소기업의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이나 기업 규모별 부가가치 비중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6년부터 하락하여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 평균적인 개념으로는 1999~2009 기간 중 중소기업의 비중이 하락한 뚜렷한 증거는 없다.

반면, 대기업군에서는 동일 기간 중 10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기업군(재벌 포함)의 비중이 감소하다가 2007년부터 급속도로 증가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물론 타 산업 특히 서비스 부문의 통계가 없기 때문에 경제 전체에서의 대기업·중소기업의 비중은 구할 수 없으나, 광업·제조

업의 비중 변화만을 고려할 때 상위 재벌은 중소기업 부문보다는 하위재벌 및 중견 기업의 비중을 잠식하여 비대해지고 있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⁸⁾

이상 위에서 인용한 모든 통계 추정치를 종합해보면 30대 이상의 매출과 부가가치는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이하의 재벌을 포함하는 대기업군의 경우는 하락하여 중소기업·대기업 비중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2) 중소기업 부문 진출

4대, 10대, 30대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는 2007~2011 기간 중 평균기준으로 4대의 경우는 27개, 10대는 21개, 30대는 14개로 늘어났다. 2002~2006 기간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숫자이지만, 자산규모나 매출액의 증가와 비교하여 볼 때 과도한 계열 확장 인지는 판단할 수 없다. 다만 재벌이 계열사 확장으로 중소기업 적격 업무 분야를 잠식하고 있다면 이는 효율성의 차원을 떠난 도덕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공정거래 발표 자료를 보면,⁹⁾ 2007.4~2011.4 기간 중 자산 5조 이상의 상호출자 제한집단 중 35개의 집단의 총 계열사수는 2011년 말 현재 1,282개사이며 이는 2007년 4월과 비교하여 볼 때 393개나 증가한 숫자이다.

35개 집단 중 22개 집단이 74개 계열 회사를 설립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품목, 사업조정 신청업종, 식·음료 소매업, 수입품 유통업, 교육서비스업, 웨딩서비스업 등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¹⁰⁾ 총수자녀(2~3세)가 지분 보유 등을 통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8개 집단의 17개 회사로 집계되었다.

74개 중소기업 관련 계열회사 수는 35개 기업집단 총 계열 회사수의 5.8%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4년 동안 74개 계열사의 증가를 놓고 중소기업 분야를 싹쓸이 했다면, 중소기업 업종에 무차별하게 진입하여 껍질시키고 있다는 것은 과장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공정위는 계열사 수 증가 자체보다는 계열 확장 과정에서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와 중소기업 영역잠식이 재벌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재벌기업들도 리스크 분산을 위해 사업을 다각화 하다보면 중소기업 영역에 진출할 수도 있다. 그러나 김, 면류, 상조업, 웨딩 서비스업, 베이커리, 커피판매점에까지 투자를 한다면 이는 경제논리를 떠나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수 있는 사업

8)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관련된 기업결합 건수는 2001년에 173, 2010년에는 202건으로 증가하였다가 2011년에는 163건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중 결합 금액은 14.1조, 19.7조, 그리고 26조원으로 증가했다(공정거래위원회 「2012년 공정거래 백서」, p.178 참조).

9)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현황 정보공개」,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2.2.28. (<http://www.ftc.go.kr/>).

10) 22개 대기업 집단 소속 74개 계열사가 진출한 중소기업 영위 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품목) 5개 품목(LED램프, 김, 면류, 골판지상자, 레미콘 등)(14개사), ②(사업조정 신청업종) 7개 업종(MRO, 식자재유통, SSM, 철근가공, 아울렛, 대형마트, 상조업 등)(21개사), ③(기타 업종) 식·음료소매업(19개사), 수입품유통업(18개사), 교육서비스업(5개사), 웨딩서비스업(2개사) 등.

확장이다.

3) 법과 정의를 무시하는 재벌

조운제(2009)는 재벌은 “정치권력과 법조·언론 등에 대한 전 방위적인 로비로 초법적 지위를 누리며, 시장을 지배하고 중소기업의 성장기회를 제한하고(p.162),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재벌은 정치인에 대한 정치자금 지원, 검찰 및 법조계, 학계, 문화계 및 우리 사회 여론 주도층에 대한 로비와 영향력을 점점 더 확대해 왔다(p.175)”고 주장한다. 재벌은 사회적인 혹은 시장 권력으로 부상하여 초법적인 존재로 군림하고 있다는 것이다.¹¹⁾

대기업 집단은 국내의 판매시장과 구매시장에서 모두 독과점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교역재의 경우, 수입자유화로 재벌의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어 소비자가 입는 손실은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서비스가 대중을 이루는 비교역재의 경우 재벌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불공정한 방법으로 경쟁력이 있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들을 편입하거나 골목 상권을 장악하여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는다면, 이는 법적인 제재의 대상이 된다.

재벌이 구매자로서 원자재·중간재를 구입하는 경우 재벌은 가격을 통제하거나 부품공급 업체들의 납품가격을 강압적으로 인하하는 부당한 거래를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 바로 이러한 독과점의 병폐인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제재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공정거래법¹²⁾이다.

그러나 재벌의 공정거래법을 포함하는 위법행위 사례는 감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¹³⁾ 일감 몰아주기로 사회적인 지탄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벌의 내부거래는 증가하고 있다. 2012년 46개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금액은 186조원으로 2010년보다 30%나 증가했다.¹⁴⁾ 내부거래는 재벌 2,3세의 편법상속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더하여 부당한 담합행위, 독과점 행위,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평 하도급거래 및 지원, 골목 상권 잠식 등 그 리스트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삼성 에버랜드 전환 사채 편법 증여, 한화 회장 배임, 현대차 비자금 조성, SK의 분식회계 등 재벌 총수의 위법사례는 꼬리를 물고 있다. 이러한 위법행위 때문에 재벌은 인기만 없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11) 안철수(2012)는 경제력이 재벌들로 집중되면서 대기업집단은 현행 법규상 초법적인 존재로 군림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재벌은 무소불위, 안하무인의 권력을 갖고 있어 정부 정책을 좌우할 수 있으며, 사법적 단죄를 피해가고 있으며, 정치, 사법, 언론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시장의 공공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p.125).

12) 정확한 명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서 동 법은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을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점차 전환하되, 민간기업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통하여 창의적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 권익도 보호하는 건전한 경제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고, 「독과점의 폐단은 적절히 규제」한다는 헌법 정신에 근거하여 1980년 12월 31일 제정되었다.

13) 부록 4 참조. 2008년부터 2012년 8월까지 30대 그룹은 248건의 공정거래관련법(시정명령 부과사건)을 위반하였다(한겨레 신문, 2012. 9.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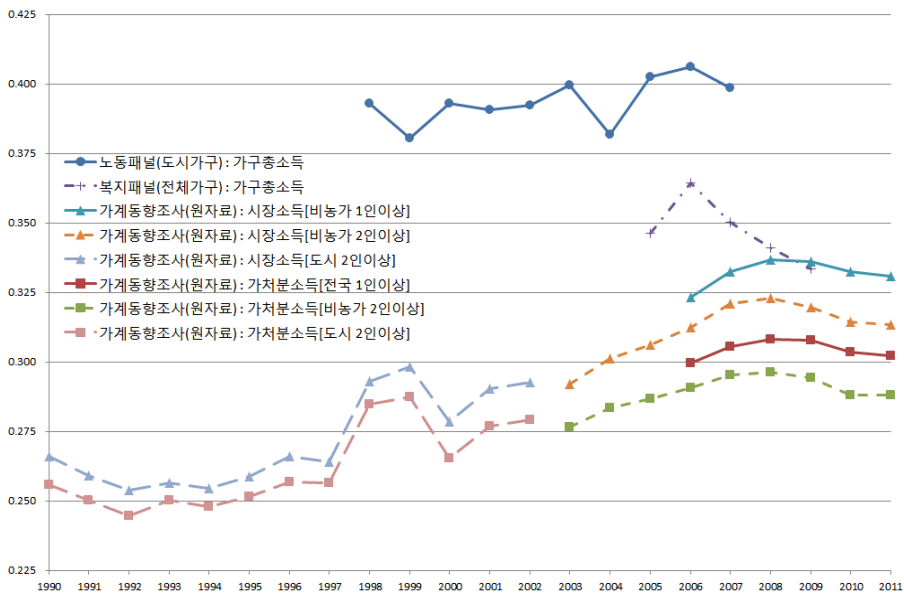
14)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 분석결과」,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2.8.

4. 소득분배의 불균등과 양극화

1) Gini 계수와 양극화 지수

소득불평등 정도는 추계에 사용된 자료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그림 2> 참조). Gini계수는 외환위기 기간 중에 크게 증가(악화)하였다가 경제가 안정을 되찾으면서 정상수준으로 회하였으나 그 후 다시 상승하다가 2008년 유동성 위기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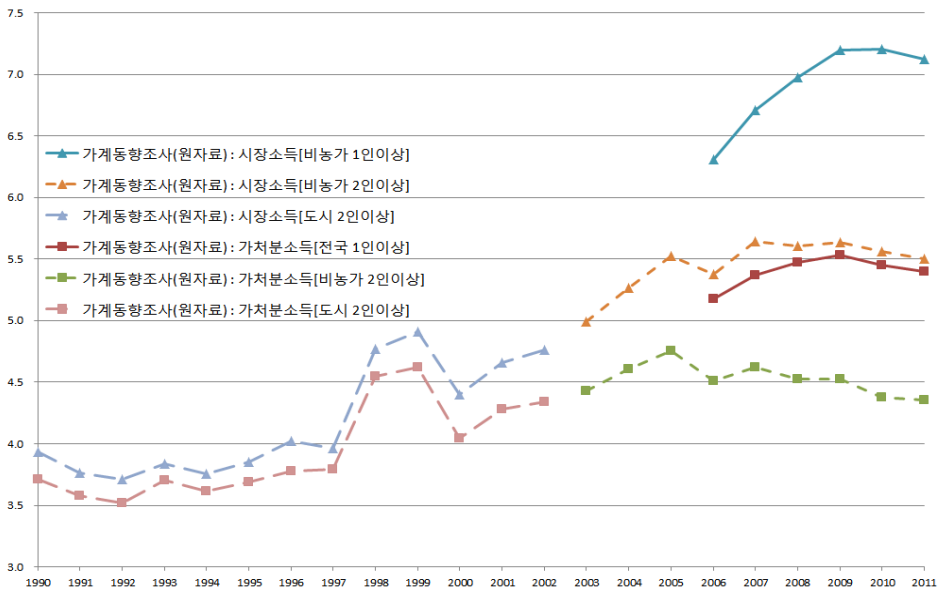
<그림 2> 1990년 이후 우리나라 전체 가구소득 대상 Gini계수 추이



- 주: 1) 노동패널은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1998~2008년까지 조사되어 있으나, 가구소득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조사되어 소득 대상 지니계수는 1997~2007년의 기간만을 대상으로 구할 수 있음(자료의 신빙성 문제로 인해 1997년 소득자료는 제외). 노동패널 지니계수는 도시지역 가구총소득(금융소득+부동산소득+사회보험소득+이전소득+기타소득-세금)을 대상으로 함.
- 2) 복지패널은 전국가구를 대상으로 2005년부터 조사되고 있으며, 2012년 8월 현재 2009년까지 자료만 제공되고 있음. 복지패널 지니계수는 전국 가구총소득(근로소득+사업·부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공적이전소득-세금)을 대상으로 함.
- 3) 가계동향조사(구 도시가계조사)는 2002년까지 도시가구만을 대상으로 조사되었고, 2003년부터 전국 비농가가구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2005년까지는 2인 가구 이상, 2006년부터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되었음. 가계동향조사 지니계수는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 및 가처분소득(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공적비소비지출)을 대상으로 함(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기초노령연금+사회수혜금+세금환급금, 공적비소비지출=경상조세+연금+사회보험).
- 4) 가구소득은 당해 연도 가구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산출한 균등화된 연간가구소득 기준이며(균등화소득), 소득분배지표(지니계수) 산출을 위해 가구 가중치에 가구원수를 곱하여 개인(인구)단위 지표로 전환하였음(소득개인화).

동일기간동안, 전체 가구 소득 대상 소득 5분위 비율, 10분위 비율의 비중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소득 상위 1%의 비중은 2000~2007 기간 중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2008~2010 기간 중에는 하락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커다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그림 3>~<그림 5> 참조). 4.2 절은 Gini계수의 상승은 고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고보다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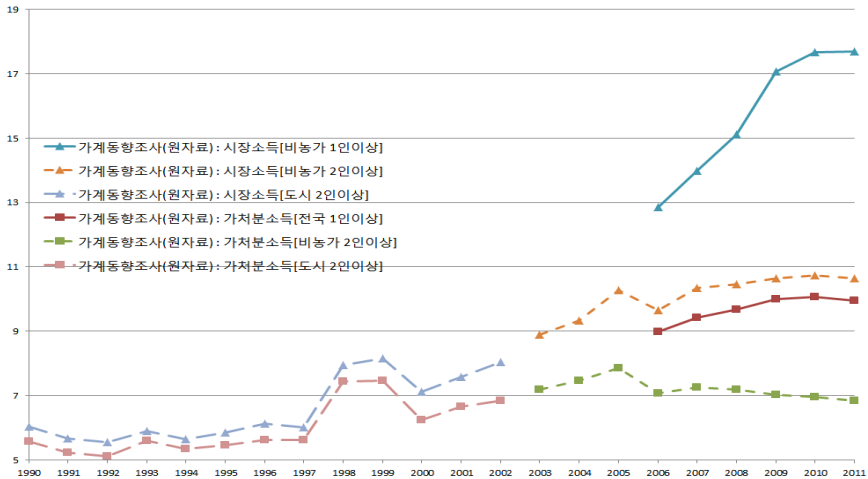
<그림 3> 1990년 이후 우리나라 전체 가구소득 대상 소득5분위배율 추이



- 주: 1) 소득5분위배율은 개인화된 균등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상위 20%계층의 소득을 하위 20%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계층간 소득격차를 보여줌.
2) 가구소득은 당해 연도 가구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산출한 균등화된 연간가구소득 기준이며 (균등화소득), 소득분배지표(지니계수) 산출을 위해 가구 가중치에 가구원수를 곱하여 개인(인구)단위 지표로 전환하였음(소득개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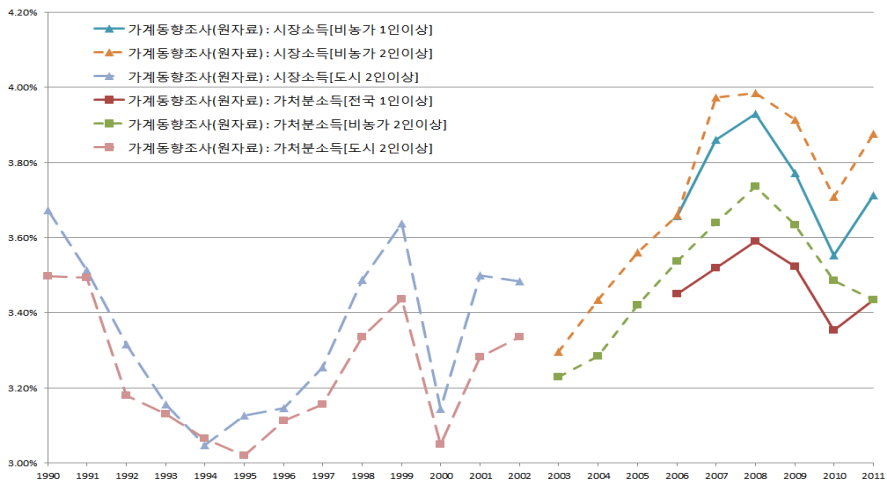
15) 김낙연(2012)은 1976~2010년 기간 동안의 소득세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 소득을 추정한 후 이 소득의 분포를 기준으로 소득 집중도와 추이를 산정 한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소득 집중도, 특히 소득 최상위 계층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 하고 있다. Gini계수 추계에 이용 되는 통계청의 가계조사는 표본조사로서의 한계가 있다. 그러나 종합 소득세 · 근로 소득세의 납세자가 전체 과세 대상자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더구나 납세 자료로 추계한 개인 소득도 신빙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세청 자료는 고소득층의 소득집중은 반영하나 경제 전체의 Gini를 추산 하는 통계자료로서는 한계가 있다.

<그림 4> 1990년 이후 우리나라 전체 가구소득 대상 소득10분위배율 추이



- 주: 1) 소득10분위배율은 상위 10%계층의 소득을 하위 10%계층의 소득값으로 나눈 값으로 계층간 소득격차를 보여줌.
 2) 가구소득은 당해 연도 가구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산출한 균등화된 연간가구소득 기준이며 (균등화소득), 소득분배지표(지니계수) 산출을 위해 가구 가중치에 가구원수를 곱하여 개인(인구)단위 지표로 전환하였음(소득개인화).

<그림 5> 1990년 이후 우리나라 전체 가구소득 중 상위 1%계층 소득의 비중



- 주: 1) 상위 1%계층의 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를 나타냄.
 2) 가구소득은 당해 연도 가구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산출한 균등화된 연간가구소득 기준이며 (균등화소득), 소득분배지표(지니계수) 산출을 위해 가구 가중치에 가구원수를 곱하여 개인(인구)단위 지표로 전환하였음(소득개인화).

(1) 양극화 지수

신동규(2010)의 계량 분석에 의하면 1997~2004년 기간 중 비 근로소득 특히 부동산 소득과 이전 소득의 증가로 소득분배에 있어서 중산층이 위축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다. 그러나 유경준(2007)은 신동규의 자료상(노동패널통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Gini계수와 양극화 지수(ER)는 서로 다른 개념이나 실제의 추정치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소득불평도와 양극화는 서로 다른 개념이나 유사한 변동추이를 보이고 있어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이다.

반면 조윤제 외(2012)의 연구는 두 가지 추가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 양극화의 진행을 시사하고 있다. 즉 1990년대 이후 가계의 가처분 소득 분포를 보면 중위소득(median income)의 50%미만인 가구의 비중, 즉 상대적 빈곤율은 1990년에 7.1%였으나 2010년에는 12.5%로 상승하였다. 중위소득 50%~150%에 속하는 중산층의 비중은 동일 기간 동안 75.4%에서 67.5%로 감소하였으나 150%이상 고 소득층의 비중은 17.5%에서 20%로 증가하였다.

즉, 중산층의 5%에 해당하는 가구가 저 소득층으로 하락하였고 약 3%는 고 소득층으로 이동한 것을 보면 중산층의 축소는 분명해진다. 또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종합소득세 상위 20%와 하위 20%의 5분배비율은 1998년 이후 2009년에는 150% 이상 크게 확대되었다.

반면 임성은(2011)은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가 확대되었으나 최근에는 둔화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중산층의(중위 소득 70~150%)의 비중은 2008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빈곤층(중위소득 50% 이하)의 비중은 안정된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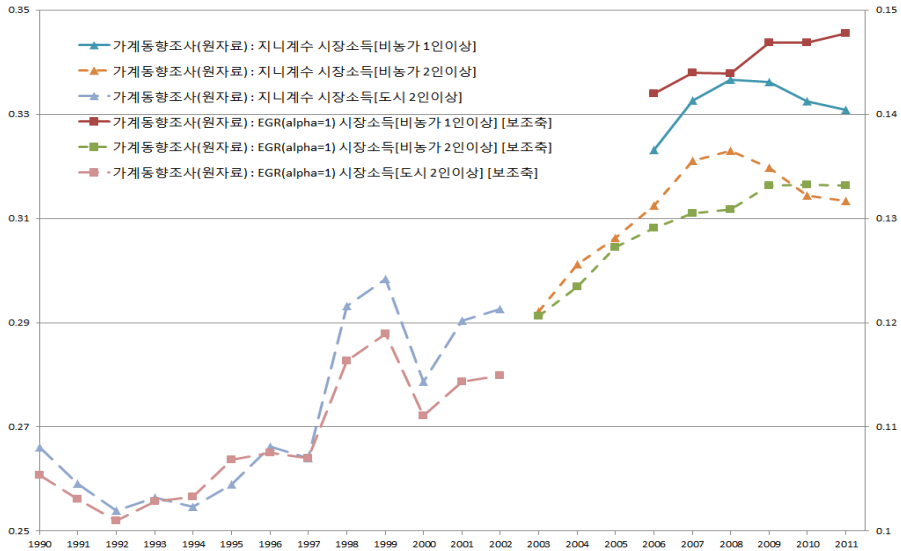
설운(2011)은 (2003~2010)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2006년 이후 소득 양극화는 감소하였으나 소비 양극화는 안정세를 유지했고,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 양극화와 교육비 양극화는 크게 확대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계량분석에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이유를 검토해 보기 위해, 1990~2011년 기간의 가계 동향 원자료를 이용하여 양극화지수(EGR)¹⁶⁾를 산정한 결과, 2007년 이후 Gini 와 EGR은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 양극화가 더 심화되었다는 증거를 발견 할 수 없었다(<그림 6>과 <부표 3>, <부표그림 2,3> 참조).

그러나 일반 시민이나 정치권은 위에서 종합한 계량분석 결과보다는 단편적인 자료나 심증에 의존하여 모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유경준(2012)은 양극화 지수를 계층 간의 갈등을 야기시키려는 의도로 사용하거나 상대적 소득 불평도와 달리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목표로 삼는 것은 계층 간 갈등을 더 조장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16) EGR지수의 개념 및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부록 2>를 참조하기 바란다.

<그림 6> 지니계수와 양극화지수(EGR지수)의 추이($\alpha=1.0$)



- 주: 1) 가계동향조사(구 도시가계조사)는 2002년까지 도시가구만을 대상으로 조사되었고, 2003년부터 전국 비농가 가구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2005년까지는 2인 가구 이상, 2006년부터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되었음. 가계동향조사 지니계수는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을 대상으로 함.
 2) 가구소득은 당해 연도 가구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산출한 균등화된 연간가구소득 기준이며(균등화소득), 소득분배지표(지니계수) 산출을 위해 가구 가중치에 가구원수를 곱하여 개인(인구)단위 지표로 전환하였음(소득개인화).
 3) EGR지수를 구할 때 $\beta=1$ 로 설정하였음.

2.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인

소득분배는 경제의 개방과 기술진보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크게 악화 될 수 있다.¹⁷⁾ 무역자유화로 노동집약적인 제품이 중국과 다른 개도국들로부터 대량 수입되고, 대기업들이 저임금의 후진국에 투자를 확대하면서 경쟁으로부터 밀려난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생산시설을 외국으로 이전하여 중소기업 부문이 크게 위축되어 많은 근로자들이 저임금의 자영업이나 서비스업의 비정규직으로 옮겨가면서 빈부격차는 확대된다.

경제 발전과 기술진보로 제조업 부문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고용유발 효과도 감소되는 현상도 소득분배의 불균등을 악화 시키고 있다. 기술진보로 노동 집약도가 하락하면 비숙련 근로자들은 제조업에서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타 부문, 특히 서비스 부문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와 아울러 숙련노동자와 자본이 생산성이 높은 기술지식 집약적인 산업으로 이동함으로써 전문직 근로자들의 임금이 증가한다. 반면 비숙련 내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 근로

17) 이 외에도 인구의 고령화, 조세와 이전 지출도 분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조윤제 외, 2012 참조).

자들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하락하여 소득분배는 더 불균등해진다.

2001-2011년 기간 중 제조업은 경제개방과 기술진보의 결과로 고용과 임금구조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변화를 보여 왔다. 이러한 변화는 분배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자료를 보면 제조업 부문의 고용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5%에서 19.7%로 5.8pt 감소하였다. 반면 동 기간 중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63.6%에서 70.5%로 6.9pt나 증가했다. 고용자수의 변화를 보면 전체 임금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제조업의 근로자 수는 크게 변화하지 않는 반면 서비스업의 근로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임금근로자의 증가를 전부 서비스업이 흡수하고 있다.
- 제조업 부문에서 종업원 300인 이상의 대기업의 고용은 총임금근로자 대비 5.2%에서 3.3%로 하락하였으며 종업원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은 20.3%에서 16.4%로 하락 하였다. 감소폭은 중소기업이 크지만 근로자수의 변화를 보면 중소기업의 경우 13만 명 정도 증가한 반면에 대기업의 경우 13만 명 정도 감소하였다.
- 서비스 부문의 고용변화를 보면 대기업의 고용은 6.6%에서 7.6%로 1.0pt 증가했으나 중소기업 부문은 57.1%에서 62.9%로 무려 5.8pt나 상승했다. 근로자수는 대기업의 경우 44만 명 정도 증가한 반면에 중소기업의 경우 328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 서비스 부문의 비정규직 비중은 28.5%에서 36.3%로 7%pt 정도 증가 하였고,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은 거의 10%pt나 하락 하였다.

위의 네 가지 변화를 종합하면 전체 고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기업 제조업으로는 유입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대기업 제조업으로부터 방출된 노동이 저생산성·저임금의 서비스 부문의 중소기업으로 이동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대기업은 정규·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거의 동일한 비율로 방출하였고, 서비스업 부문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비중이 증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이 제조업으로부터 서비스 부문의 비정규직으로 이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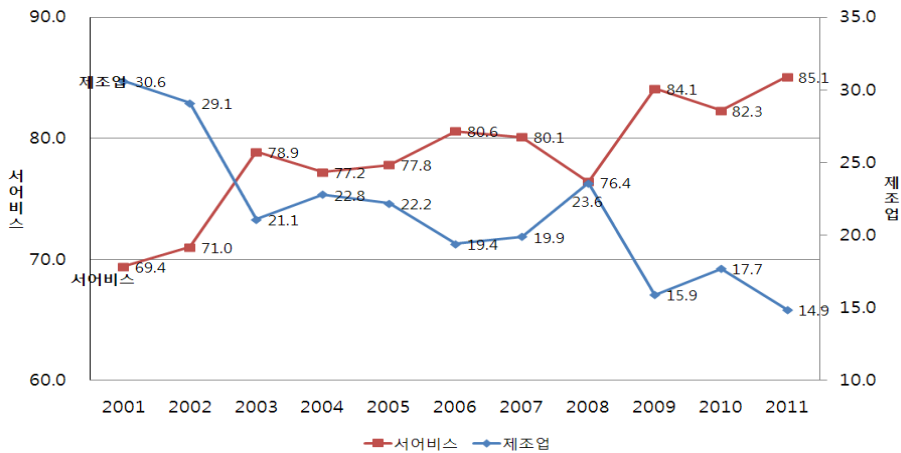
그 결과로

- 소득하위 20분위의 제조업 고용은 22.7%에서 11.4%로 13.4pt나 하락하는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15%나 증가했다(<그림 7>). 비숙련 제조업 근로자들이 저생산성·저임금의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대거 서비스업으로 이동함에 따라 최하위 10% 임금근로소득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70%에서 85%로 크게 증가하여 소득하위 10%의 10분위 격차는 4.4배로부터 5.4배로 상승하는 등 소득불균등이 확대되고 있다(<그림 8>).

- 경제 전체의 비정규직의 비중은 2001-2004 기간 중 37%로 급상승하다가 그 이후에는 35% 선에서 안정되고 있다(<그림 9> 참조). 경제 전체의 비정규직의 임금수준도 2001년 정규직 대비 63.5%였으나 2008년에는 54.6%로 하락한 후 2009년부터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표 6> 참조). 이러한 안정세는 소득분배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7> 소득하위 20분위 임금근로자의 산업별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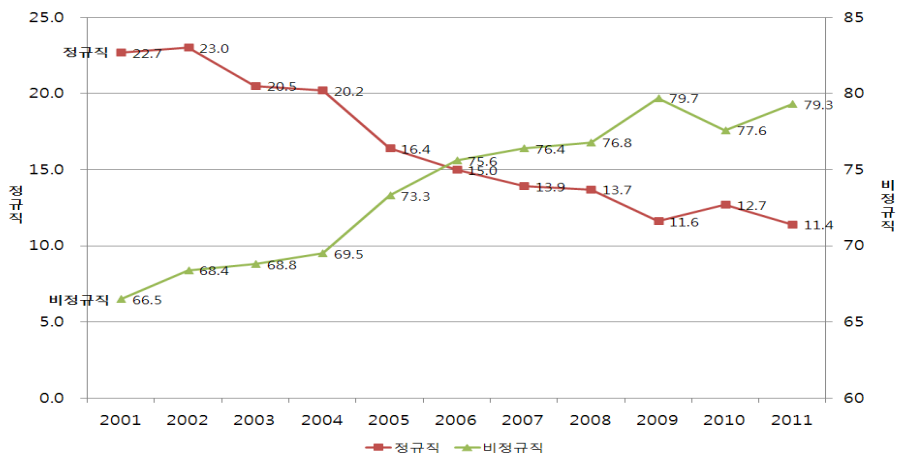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8월 자료.

<그림 8> 소득하위 10분위 고용형태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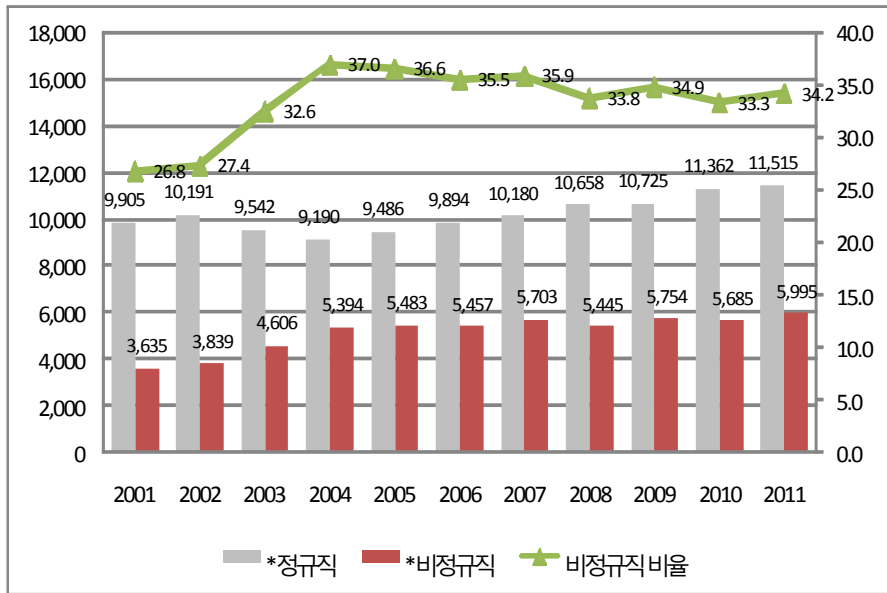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8월 자료.

<그림 9> 비정규직 규모 및 비중 추이

(단위: 천명,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8월 자료.

<표 6>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 추이

(단위: 만원, %)

구분	정규직(A)	비정규직(B)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 (B/A*100)
2001	137.7	87.4	63.5
2002	145.6	97.7	67.1
2003	167.8	102.8	61.3
2004	177.1	115.2	65.0
2005	184.6	115.6	62.7
2006	190.8	119.8	62.8
2007	200.8	127.6	63.5
2008	212.7	129.6	60.9
2009	220.1	120.2	54.6
2010	229.4	125.8	54.8
2011	238.8	134.8	56.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8월 자료.

위에서 인용한 기존 통계와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균형과 양극화가 진행되었음은 분명하다. 다만 분배의 불균등보다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다. 최근 Gini계수의 안정된 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경기침체로 저소득층의 임금소득도 하락하게 되나 2007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저금리, 임대 소득과 배당의 하락으로 고소득층의 자산소득도 동시에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세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일단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여 물가와 자산 가격이 오르면, 소득분배와 양극화는 다시 악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3) 재벌과 소득불균등

재벌총수들과 이들 가족의 천문학적인 소득과 자산은 계속 불어나고 있다.¹⁸⁾ 이런 숫자만을 놓고 보면 재벌의 비대로 분배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게 된다. 그러나 재벌총수와 가족들은 소득 상위 0.01%~0.02%에 속하는 소수의 그룹에 지나지 않으며 재벌의 팽창이 소득하위 계층의 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이상 Gini계수가 상승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최근 연구결과나 통계자료도 재벌의 비대로 Gini계수가 상승하고 있거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3개 대기업 집단의 고용임금 통계가 없어 소득분배와 재벌 비대 간의 인과 관계도 규명할 수 없다. 그러나 아래 제시하는 단편적인 통계 몇 가지를 종합해 보면, 재벌의 팽창이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 63개 재벌 총수와 가족들이 속하는 소득상위 1%의 비중은 2010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으나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 지표로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 2007년부터는 중소기업·대기업 임금 비율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 따르면 2001년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은 대기업의 63%였으나 그 후 계속 하락하다가 2007년부터는 57%수준에서 안정되고 있다(<표 7> 참조).

이와 같은 안정세는 대기업의 서비스업 진출에서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업의 고용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53.7%에서 2011년에 67.6%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동일한 비중은 6pt 증가에 그치고 있다(<표 8> 참조).

18) 김낙연(2012)은 한국에서 소득 상위 1%에 속하는 개인들의 수는 39만명으로 평균 소득은 2억, 0.01%의 경우 개인들의 수는 3,895명이며 평균소득은 27억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표 7> 기업규모별 임금격차 추이

(단위: 만원, %)

구분	사업체노동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전규모 (5인이상)	중소규모(A) (5~299인)	대규모(B) (300인이상)	(A/B)*100	전규모	중소규모(A) (300인미만)	대규모(B) (300인이상)	(A/B)*100
2001	175	161	228	70.9	124	116	185	62.8
2002	195	177	263	67.5	133	124	201	61.6
2003	213	191	290	65.8	147	135	225	60.1
2004	225	202	316	64.0	154	142	238	59.8
2005	240	216	336	64.3	159	147	247	59.4
2006	254	228	349	65.4	166	153	260	58.7
2007	268	243	374	64.8	175	161	281	57.2
2008	280	249	392	63.6	185	170	296	57.4
2009	286	256	393	65.0	185	170	294	58.0
2010	305	270	429	62.9	195	179	316	56.7
2011	302	268	427	62.6	203	188	326	57.5

주: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임금은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을 가리키며,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의 임금은 상용직근로자 및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한 월평균 임금총액을 나타내어 전자의 임금이 후자의 임금을 상회함.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 연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8월 자료.

<표 8>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산업별 고용변화

(단위: %)

구분	300인 미만 중소기업						300인 이상 대기업					
	농림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	건설업	서비스업	합계	농림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	건설업	서비스업	합계
2001	1.5	23.1	0.4	10.1	65.0	100	0.4	42.9	0.8	2.3	53.7	100
2002	1.2	22.7	0.3	10.2	65.7	100	0.3	41.2	0.7	1.8	56.1	100
2003	1.2	22.1	0.5	10.3	65.9	100	0.3	41.5	0.9	2.4	55.0	100
2004	1.2	22.2	0.4	9.9	66.3	100	0.1	41.8	0.8	2.1	55.2	100
2005	1.2	20.9	0.4	9.8	67.7	100	0.3	41.5	0.7	2.4	55.1	100
2006	1.0	20.1	0.4	9.7	68.8	100	0.3	40.6	1.2	2.3	55.7	100
2007	1.2	19.4	0.4	9.7	69.4	100	0.3	39.9	1.2	2.0	56.6	100
2008	1.1	18.8	0.9	9.5	69.7	100	0.2	36.5	1.3	2.3	59.7	100
2009	1.2	18.1	0.9	8.7	71.1	100	0.5	30.1	1.4	3.3	64.8	100
2010	1.2	19.1	0.8	8.9	70.0	100	0.2	31.0	1.1	2.3	65.3	100
2011	1.2	18.5	0.8	8.7	70.8	100	0.2	29.1	0.9	2.2	67.6	1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8월 자료.

서비스업 부문에서도 대기업의 임금이 중소기업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하면 대기업의 중소기업 진출이 서비스 부문 임금의 상대적인 하락을 억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김주훈(2012)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나 동시에 크게 생산성도 증가하여 대기업의 단위노동 비용은 중소기업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확대된 것은 정상화되는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소득분배 개선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분석이다

즉, 재벌을 포함하는 대기업들은 우월한 교섭력을 이용하여 시장접속의 통로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간 분업 조식을 조정하여 높은 생산성과 고용감축, 고임금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해 비정규직·과연제들이 도입되었으나 대기업 정규직 반발로, 대기업 노동시장에 왜곡이 발생하여 제한적 고용을 통해 고생산성 고임금이 유지될 수 있었다(p.5).

5. 한국적인 자본주의: 개혁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1) 개혁의 기본방향과 여건

3과 4절의 통계적인 검증과 기존 연구 자료의 결과를 종합하면,

- i) 자산규모 5조 이상의 대기업집단의 매출액과 부가가치는 총출제가 폐지된 후 GDP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5-30대 재벌이 4대보다 앞서가고 있다.
- ii) 광업·제조업만을 고려할 때 상위 30대 재벌은 중소기업 부문보다는 하위 재벌과 중견기업의 비중을 잠식하여 비대해지고 있어 보인다.
- iii) 경제 전체에서 중소기업·대기업의 비중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두 부문 간의 경제력 비중의 안정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최근의 통계는 대기업 부문에서 상위 재벌로 경제력이 집중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iv) 근년 재벌의 법과 도덕성을 무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재벌 관련법과 규제를 엄격히 집행하여 재벌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할 수 있다.
- v) 최근 재벌이 중소기업 업종에 무차별하게 진입하고 있다는 주장은 과장된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미 내수에 전문화된 재벌과 대기업은 전통적으로 중소기업이 대중을 이루는 대형마트, 식음료 서비스 등 여러 서비스업에서 시장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 vi) 2008년부터 Gini계수나 양극화 지수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vii) 재벌의 팽창이 소득분배를 악화시켰을 개연성은 있으나 자료의 부족으로 이를 증명할 수 없다.

이상의 검증 자료를 토대로 5절은 금융부문 혁신과 소득불균등과 양극화를 다루고 6절에서는 재벌개혁의 방향을 제시하여 한국의 혼합경제 시장 제도의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그러나 논의에 앞서 우선 개혁의 조건은 무엇이며 개혁의 여건이 성숙되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시장의 자유화와 개방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1998~99년에 실행되었던 재벌개혁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실패로 끝났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어떠한 이유로 재벌이 정치권의 개혁 표적이 되었는가? 이런 의문이 풀려야만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개혁의 방향과 범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98~99년의 재벌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어 경영투명성이 확보되고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재벌이 문어발식 경영을 자제하였다면 경제 민주화가 제기되었을 것인가? 재벌의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이 논의된 지 오래이나 재벌은 누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없다. 보수와 진보는 과거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없는 빈 공간에서 각자 해묵은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둘째로, 한국은 세계에서 9대 무역국으로서 성장한 개방경제로서 주요 교역국들과 마찰 없이 경제교류를 늘려가려면 국제경제 질서의 토대가 되는 자본주의의 국제적인 규범을 수용해야 한다. 수출입을 합한 무역규모와 연간 금융거래는 국내 총생산을 넘어서고 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의 통합을 되돌릴 수 없다면 한국은 제도와 정책을 글로벌 시스템과 일관성이 있도록 재편해야 한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한국의 주요교역 대상국, 미국과 유럽의 자본주의 체제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셋째로, 앞으로 2~3년은 광범위한 개혁의 적기가 아닐 수도 있다. 세계경제는 국제화와 기술진보가 이끌고 있는 급격한 구조적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격동기를 지나고 있다. 경기침체, 소득불균등, 금융의 난맥상의 원인이나 그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정책을 선별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 선택이 이념 논쟁으로 격화되어 정책 대응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더구나 한국의 경우, 사정은 더 복잡한 것이 시장제도의 개혁은 정치개혁과 맞물리면서 그 방향마저 가늠하기 어렵게 되고 있다.

2) 금융제도: 단순화를 위한 혁신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금융시장의 자유화와 개방은 (i) 경쟁을 촉진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ii) 금융부문의 신축성과 탄력성을 높여 금융위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금융의 자유화와 개방으로 금융 부문은 1990년 초 이래 그 규모(금융자산

/GDP)가 2배 이상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에는 50%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괄목할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난 15년 동안 한국의 금융부문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 증거도 없고 여러 크고 작은 위기를 막지도 못하였다. 2003년의 신용카드 사태, 2008년의 외화 유동성위기, 저축은행의 부실과 도산, 1000조에 육박하는 가계 부채들이 모두 금융자유화의 한계를 입증하고 있다.

(1) 자유화의 공과

- 금융개방과 자본 유출입 변동성 증가

금융시장의 개방으로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이 크게 증가하여 환율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환율변동성의 증가로 경제의 전반적인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물가안정 목표제(inflation targeting)의 운영이 어렵게 된다. 바로 이 때문에 IMF 마저도 한국과 같은 신흥시장 경제는 자본 유출입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 하고 있다.

-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은행을 비롯한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산 운영 패턴은 경기 친화적이어서 부동산대출이 급격히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등 경기순환의 진폭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¹⁹⁾ 한국 경제는 2003년의 신용카드 사태 후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팽창하였다가 소멸하여 아직도 그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모두 부분적으로는 금융기관의 경기 친화적 행태에 그 원인이 있다.

금융기관의 겸업화, 부문 간 차단벽 제거,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으로 금융기관간의 연관관계가 다양해지고 심화되고 있다. 그 결과로 전과는 달리 어느 한 부문의 위기는 전 금융시스템으로 급속히 전염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시장의 회복이 지연되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가계부채의 부실은 전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악화할 위험이 있다.

- 은행, 생명보험시장의 집중도 증가

은행 간 합병으로 4개의 대형은행이 탄생하여 여·수신시장에서 과점체제를 형성하고 있어서 담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CD금리 담합). 재벌이 생명보험업과 카드업의 40% 이상을 차지하여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대형은행이 부실화되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보험회사의 경우 재벌의 건전성이 무너지게 될 위험이 있어, 이들 대형금융 기관은 파산할 수 없는 대마불사의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이 대마불사의 특권이 대형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심화 시킬 수 있다.

19) 한국 금융의 버블형성과 소멸(Boom-bust)의 사이클 관련 Jeong(2009) 참조.

(2) 감독기구의 재정비와 강화

2007년 미국의 주택시장의 함몰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로 노출된 금융시장의 부조리와 난맥상은 대부분의 선 후진국에서 금융의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앞으로의 감독 개편은 G-20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국제적인 개혁, 예를 들어 Basel III와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은행을 비롯한 비은행금융기관의 부실경영을 예방하기 위한 거시건전성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감독 체계는 1998년 은행, 보험, 증권으로 분리되었던 감독기구를 통합한 이후 계속 개혁의 대상이 되었고, 새로운 정권이 탄생할 때마다 제도의 개편이 뒤따랐다. 그러나 저축은행의 도산과 부실이 감독당국의 건전성 감독의 부재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귀결되면서 감독당국은 일반시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

현재 금융 감독개편을 위한 여러 제안이 논의 되고 있으나 모두 장단점이 있어 가장 적절한 안의 선택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김동원 외, 2012). 어느 안을 선택 하던지 간에 앞으로의 개편은 정치적인 독립성을 보장 하되 책임성을 강조하여 감독 당국이 일반 국민의 신뢰를 회복 할 수 있는 체제정비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3) 금산 분리

현재 재벌은 금산분리의 원칙에 따라 상업은행 지분 소유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러나 비은행 금융기관과 자본시장 기관의 소유경영에 있어서는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보험, 신용카드 등의 업종에서 과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총출제가 폐지된 후 재벌의 금융·보험 계열회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금융자유화로 은행을 비롯한 비은행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을 제한하던 규제가 완화되면서 은행과 비 은행은 상호진출을 통해 동질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동질화를 허용한다면 금산분리의 원칙은 비 은행 부문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재벌의 신규 진출은 규제하더라도 비 은행 및 자본시장 부문으로 부터 퇴출을 강요 할 수는 없다. 바로 이 때문에 은행과 투자는 엄격히 구분하고, 비은행 금융기관과 자본시장기관의 업무를 제한하여 기구를 단순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4) 금융의 단순화

최근 연구에 의하면 후진국이나 신흥시장경제에서 민간신용은 그 규모가 GDP를 초과하는 경우 더 이상 경제 성장을 촉진하지 못하며, 선진국에서는 금융의 비대가 생산성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ecchetti and Khanroubi, 2012). 한국 자료를 이용한 연구도 유사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²⁰⁾ 즉 한국은 이미 적정수준 이상의 자원을 금융부문에 투자하고 있어 추가적인 투자는 타 부문의 투자 감소를 초래하여 경제성장이나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 된다.

금융시장에는 고수익·저위험을 보장하는 광고가 넘쳐나고 있으나 대부분의 상품은 구조면에 서 차별화하기 힘든 유사 변종에 불과 하다. 소비자들은 이들 상품구조를 이해할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소비자들의 한계를 악용하는 부당한 상품들이 범람하여 불필요한 금융매개비용 즉 상품생산 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비용이 증가 하는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 금융기관과 금융상품 단순 화는 이런 매개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3) 소득불균등과 양극화

2008년 이후 소득분배와 양극화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있으나 경제가 침체로부터 벗어나 일단 회복기에 접어들면 반전 될 것으로 예상 된다. 분배구조 악화와 관련하여 4.2 소절은 경제의 개방과 기술진보를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소득불균등은 이론적으로 혹은 국제비교와 과거경험에 비추어 그 적정수준을 정의할 수 없는 개념이다. 소득분배에 있어서 상대적 평등의 개념은 사회의 윤리관과 도덕적인 가치판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외국과 비교하여 Gini가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었다 하더라도 일반국민의 대다수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면 분배는 개선을 요구한다고 할 수 밖에 없다.

현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개선이 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현실적으로 한국사회가 합의를 보고 수용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소득분배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분배의 정도를 개선하려면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과 부를 재분배 하는 복지정책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사회는 양보를 전제로 하는 계층 간의 정치적인 타협으로 재분배를 결정한다. 아무리 분배의 공정성이 사회의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믿는 사람들도, 세금을 더 부담해야 된다고 한다면 거부 반응을 보인다. 또한, 정부의 이전 지출로 소득보조를 받는 저소득계층도 정부의 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분배정책은 적정분배수준을 정책목표로 선정하기 보다는 불균등의 요인을 규명하여 이를 제거·완화하거나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로 소득이 감소되는 피해 계층을 지원 하는 대안을 선택 한다.²¹⁾

복지에는 보수·진보가 없다. 경제적인 이념과는 관계없이 복지정책은 세 가지 원칙은 지켜야 한다. 첫째로 복지제도의 개편은 기존 시스템의 평가와 정리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분배구조 악

20) 최근 연구에 의하면 금융시장의 자유화와 개방이 자원의 효율적배분에 기여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반면 소득분배를 더 불균등하게 한 증거는 감지된다(Park and Park, 2012; Kim, 2010).

21) 예를 들어, 경제 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이나 기술진보로 직장을 잃어 비정규직으로 이동하는 근로자들을 정부가 직접 지원 한다. 금융기관의 고소득층에 편향된 대출 및 경기 친화적인 대출·투자 행태는 고소득층의 자산소득 증식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면 은행을 비롯한 비은행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 한다. 서어비스 부문의 비정규직의 비중을 줄이고 임금을 올릴 수 있도록 기반 시설 확충과 기술 개발 투자를 지원 한다. 소득분배의 불균등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조세, 이전 지출에 의존하는 복지정책, 고용시장의 유연화, 교육제도의 개선을 포함하는 여러 구조적인 정책이 있다(조운제 외, 2012).

화의 원인도 정확히 알아야 한다. 4절에서 기술했듯이, 소득분배구조를 악화 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경제의 개방과 기술 진보에 있다. 복지정책은 이러한 구조적 변화로 피해를 보는 계층을 지원해야 한다.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은 여러 나라의 경험을 망라하여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유사한 정책을 남발하여온 관계로 복지제도가 누더기의 형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미 대부분의 정책이 여러 차례 시행되었으나 정책수단은 합리적인 조합이나 연속성 없이 여건의 변화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되어온 관계로 기대했던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더구나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를 분석해 본 적이 없다고 한다. 이제는 마구잡이식 정책을 떠나 정책의 합리성을 강조할 때가 되었다(안종범, 2011).

둘째로,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던 복지 약속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약속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치의 지각이 변하고 있는 불확실의 시기에 복지 규모나 수단의 선정에 대한 계층 간·부문 간의 원만한 타협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보수·진보는 복지의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복지 정책의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마저 보이지 않는다, 만일 조세와 같은 재분배의 수단이 고소득층의 불만과 저항에 직면하게 되면, 정부와 정치권은 차입에 의존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일단 차입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시작 하면, 정부는 정치권의 압력을 막지 못하여 복지수요와 재정적자는 계속 증가하여 국가재정이 파탄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 GDP대비 사회복지 지출의 비중이 OECD 평균 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단 재분배를 위한 복지 지출이 늘기 시작 하면, 정치권이 재원조달 가능 범위 내에서 지출을 억제하는 절도는 기대 할 수 없다. 절도 없는 재분배 정책은 결국 재정적자의 누적으로 실패로 끝나게 된다.

셋째로, 한국의 복지지출 수준은 불행히도 국제금융시장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생각하는 적정 복지 지출로부터 크게 벗어 날 수 없다. 최근 한국의 국제신용등급을 상향조정 하면서 국제신용평가 회사가 꼽은 가장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바로 재정의 건전성이었다. 만일 이들이 시시각각 지켜보는 가운데 과다한 복지 지출로 재정과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하면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CDS 프리미엄이 뛰게 되어 해외 차입비용이 증가한다. 국내금융시장이 불안하게 되어 금융위기의 징후가 나타나면 진보, 보수를 가릴 것 없이 정부는 복지우선으로부터 후퇴하지 않을 수 없다. 후퇴는 사회갈등을 더 악화시키게 된다. 그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앞으로 복지 지출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정부가 복지 수요 충족에 필요한 재원을 대부분 세수확대로 조달하는 원칙을 고수한다면, 보편적인 복지의 증대는 경제의 안정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6. 재벌의 팽창

1) 비대의 견제

정치권이 추진하는 재벌개혁은 재벌의 비대로 정의가 지배하는 공정한 사회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가정으로부터 출발 한다. 그러나 이는 재벌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가정으로서 재벌개혁을 오도할 위험마저 있다.

3절에서 지적하였듯이 2008년부터 상위 30대 재벌로 경제력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팽창을 억제한다고 해서 재벌의 경제력이 약화되고 행태가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 재벌의 문제는 비대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재벌이 공정한 경쟁질서와 법과 정의를 무시하면서 사업을 확장하는, 즉 위법·비도덕적 지대추구에 있기 때문이다.

(1) 견제의 당위성은?

일부 재벌들은 이미 세계 시장에서 다국적 기업의 발판을 마련하는 저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세계 경제를 기준으로 할 때 몇 개의 재벌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재벌기업들은 중소 내지 중견 기업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한국이 잠재 성장추세를 이어가고, 국제 사회에서 경제력에 걸 맞는 역할을 맡고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면, 재벌들이 성장해야 하고 그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권은 순환출자²²⁾를 금지하고 총출제도도 크게 제한하는 등 한국기업의 세계화를 가로막을 수 있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재벌들은 별다른 영향력이 없다. 그러나 한국에 돌아오면 몸집이 클 뿐만 아니라 막강한 경제력을 앞세워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무법의 공룡처럼 행동 할 수 있다. 세계 시장과 국내 시장에서의 영향력의 불일치 즉 이중성이 재벌의 개혁을 어렵게 하고 있다.²³⁾

(2) 비대의 억제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가?

그러면 사업 확장과 투자를 억제한다면 정치권은 재벌의 행태를 순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보호하며 경제력 집중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형마트 사업에서 종업원 300인 이상의 대기업의 신규투자를 금지하는 규제를 고려해 보면 결론은 분명해 진다.

투자 규제로 대기업소유 대형마트가 증가하지 않으면 시장수요가 기존 중소·영세 식음료 업체로 몰리면서 이들 업체의 매출과 이익이 증가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소비자들 이 대형마트의 보다 나은 품질과 서비스를 선호하여 이미 진출해 있는 대형마트로 몰린다면 대기

22) 순환출자란 3개 이상의 회사를 순환식으로 엮여 상호출자 효과를 내는 것을 말한다. 순환출자와 상호출자의 차이에 대해서는 <부록 3>참조.

23) 한국 국민은 재벌에 대해 이중적 혹은 양면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조윤제, 2009, p.162).

업 규제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보다는 기존 대기업의 독과점 지배력을 확대하게 된다.

결국 정부는 중소·영세 기업이 대기업이 신설하지 못한 대형마트에 투자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기술 지원을 확대해야만 대기업의 상대적 비중이 하락할 것이다. 중소기업 지원이 병행되지 않는 한 대기업의 진입규제는 성공 할 수 없다.

대기업의 신규투자를 억제하기보다는 대기업이 대형마트사업에서 철수하도록 기존사업을 조정하는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의 경우도 그 결과는 다를 바 없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대기업이 비우고 간 대형마트 자리에 중소기업이 투자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대기업이 사업 조정으로 매각하는 대형마트를 매입하거나 새로운 마트를 신설하지 않는 한 경제 전체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상대적 비중은 증가하지 않는다.

총출제는 진본성향의 참여 정부가 2007년에 사실상 폐지하였던 제도이며 순환 출자금지도 논의만 되었지 투자 위축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실행하지 못했던 규제이다. 정치권은 현재 재벌 투자와 사업 확장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게 되었던 배경이나 이유를 고려하지도 않고 경제적인 효과가 무엇인지 검토 없이 재벌의 비대를 억제해야 한다는 단순 논리에 집착하여 과거의 규제를 되살리려하고 있다.

중소기업부문의 상대적 비중을 확대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순환 출자 금지나 총출제의 규제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재벌의 경제적인 지배력을 완화하려면 재벌이 가족경영을 지양하여 소유와 경영을 분리 하고 소유를 분산 다변화 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좀 더 극단적으로는 재벌의 분할, 재벌 소유기업의 매각 등의 물리적인 개혁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어느 정부가 이런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과거 경험을 보면, 경기가 둔화되고 실업이 증가하면, 역대 대통령들은 빠짐없이 재벌 총수들을 불러 투자와 고용을 늘려줄 것을 당부하는 관행을 되풀이 해 왔다. 한편에서는 재벌의 비대와 경제력 집중을 우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재벌의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답습해온 것이다.

2012년의 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이 예상된다. 2013년의 전망이 더 비관적이라면 정부는 과거 전례에 따라, 재벌이 경기 회복에 앞장서 주기를 부탁할 것이 예상된다. 그러다보면 순환출자와 총출제의 규제는 다시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

이처럼 경제 민주화와 재벌정책이 경기변동에 따라 좌우된다면, 정치권과 정부는 일반시민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상실할 것이며 당연히 추진해야 할 일부 재벌개혁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게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2) 불공정한 시장경쟁질서

재벌들이 판매·구매 시장에서 모두 독과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 되지 않는 경우 정부는 규제를 발동하여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재벌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

하여 경쟁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 소비자·노동자·이해당사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법적인 제제와 규제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헌법과 규제의 테두리 내에서 재벌 규제를 등한시·외면한 결과, 행정·사법부가 입법취지대로 법을 집행하지 못하여 재벌의 위법행위가 용인되고 있다면(안철수, 2012, p.141), 경쟁 질서를 바로 잡을 방법이 없다.

즉 정부가 무능하거나 아니면 재벌의 막강한 힘과 영향력에 압도 혹은 포획(capture)되어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망각하고 있어 재벌의 위법행위를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재벌을 개혁할 수 있겠는가? 재벌을 비난하기 전에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된 비리와 부조리부터 제거해야 할 것이며, 제거하지 못하는 정부, 특히 감독 당국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재벌들이 불법으로 상속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을 무시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나 이를 적발하여 처벌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정부에도 있는 것이다. 이런 비정상적의 척박한 환경에서 재벌의 비대를 억제한다고 해서 재벌의 불공정거래와 비리가 사라질 가능성은 희박 하다. 재벌개혁에 앞서 정치, 정부, 사법부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만일 재벌들이 법을 지키고 사회적인 책임을 수용하여 도덕성과 공정성을 사업에 반영 한다면, 재벌의 비대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재벌 개혁은 성장규제보다 재벌의 법과 정의를 무시하는 관행을 바로잡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즉 재벌들이 법을 지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용하도록 감시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정치권, 정부, 사법부, 언론에 영향을 미쳐 지대를 추구하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개혁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한다.

3) 재벌의 비도덕성: 중소기업 영역의 잠식

(1) 비도덕성

자유 시장 체제는 정의와 공정성에 눈이 어둡다. 기업이 어떻게 이윤을 창출하던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자유시장 제도는 그 수단과 방법에 대해 아무런 도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다. 도덕적인 판단은 사회전체가 결정할 과제로 남게 된다.

그러나 사회적인 윤리관이나 공공성의 관점에서 볼 때, 재벌은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예를 들어 재벌이 정치자금 지원, 로비, 자문용역 등을 통해 정당, 행정부, 언론, 심지어 학계와 법조계에 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면 (조윤제, 2009, p.173), 이러한 행태는 불법은 아니라도 도덕적인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도덕적으로 부당한 행위는 아무리 그 행위가 경제논리로는 합리화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형평의 기준에 어긋난다면 제재의 대상이 된다. 그 하나의 예가 재벌의 중소기업 영역으로의 무분별한 진출이다. 재벌이 전문화를 추구하기보다는 문어발식 경영으로, 그것도 중소기업 고유 업종

을 잠식하여 규모를 확대하여 간다면, 그 경제적인 당위성은 무엇이든 한국 사회가 도덕적으로 용납하지 못한다면 재벌은 중소기업 분야 진출을 자제해야 할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

그 어느 분야보다 중소기업 영역은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영역이다. 왜냐하면 정부는 제한된 정책 운영의 공간에서 중소기업의 보호와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목표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진보적인 성향의 참여 정부는 2006년 말 중소기업 고유 업종제도를 폐지했다. 형평을 포기 했 다기보다는 대내외 경제 여건의 변화로,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지고 경쟁제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노력 부족에 따른 국제 경쟁력 저하, 기존 참여 대기업에 대한 독과점적 시장 확보 등의 부작용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참여 정부는 고유 업종 제도 대신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영역 침해는 사업 조정제도를 통하여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동반성장제도도 이러한 정책변화의 선상에서 도입되었다(<부록 3> 참조).

이명박 정부의 동반성장정책은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등 상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검증된 교역재 부문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여 대기업의 진입을 규제하고 있다.

김영신(2011)은 동반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금 부담은 준조세에 가까우며, 동반 성장지수 순위 산정 발표는 기업들에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동반성장 정책이 아무리 대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한다 하더라도, 중소기업 적격 업종·품목을 선정하는 이상 정부의 보호와 지원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과거의 중소기업 정책을 반복하게 되는 우(愚)를 범하게 된다.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제조업부문의 중소기업의 활동무대도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 하거나 내수용 소비재와 정보기술 서비스를 생산하는 교역재(tradables) 부문의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제품의 품질향상, 판매망 확충으로 경쟁력을 길러 세계시장에서 사업의 발판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의 지원도 이런 중소기업의 세계화에 집중되어야 한다.

국내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없는 교역재 부문의 중소기업을 무작정 보호할 수는 없다. 보호보다는 퇴출을 유도하여 퇴출되는 중소기업이 구조조정으로 타 업종에서 재기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정책일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가 대중을 이루는 내수 중심의 비교역재 부문의 경우 문제는 달라진다. 대부분의 서비스는 수출하기도 어렵고 수입도 되지 않는다. 교역제의 경우와는 달리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은 외국보다는 주로 국내 생산자들 간에 이루어진다. 재벌들은 이미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마트, 식·음료 소매업, 상조업, 웨딩 서비스 등 중소기업의 적격서비스 사업에 대거 진출하여 골목상권을 장악하고 있어 재벌의 적수가 되지 않는 중소기업들이 밀려나고 있다.

최근 3년간(2009-2011) 기업형 SSM 3사(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슈퍼)의 현황을

보면, 가맹점 및 직영점의 개수가 롯데쇼핑 7개→23개→55개, 홈플러스 131개→194개→257개, GS슈퍼 138개→205개→230개로 증가했다. 공정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에 따르면, 2008년 정보공개서 등록제 도입 이후 최근 3년간 가맹본부(Franchise 본부) 수는 연평균 34.0%(2008년 1,009개→2011년 2,341개), 영업표지(브랜드)수는 32.6%(2008년 1,276개→2011년 2,976개) 증가하였으며, 2011년말 현재 국내 전체 가맹본부 수는 2,431개, 영업표지(브랜드) 수는 2,976개에 달하고 있다(공정거래 위원회 공정거래백서, 2012. 7. p.504).

재벌들의 경쟁상대는 다른 재벌과 대기업 그리고 골목안의 중소기업 및 종업원 5-9명의 영세 상인들이다. 재벌과 대기업들은 경쟁상대가 약하다 보니 품질과 서비스 경쟁을 벌이기보다는 자금력을 앞세워 중소기업 영세 상인들의 상권을 장악하여 시장점유율을 확대 하는 손쉬운 전략에 전념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은 밀려 나고 재벌들은 담합을 통해 시장을 분할 할 수도 있고 만일 규제가 없다면 독과점적인 시장구조를 형성하여 초과이윤을 획득하게 된다.

재벌의 비교역재 분야로의 진출은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가시키지는 못하는 반면 형평과 공정성을 위배하는 도덕성의 문제를 제기 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의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의 기준에 따라 재벌의 신규진입을 제한하거나 이미 진출한 기업도 사업을 철수 하도록 사업조정제도를 강화하고 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로는 독과점규제법을 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2) 재벌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집단법

재벌의 서비스업 진입을 억제하는 경우 효율성 및 공정성과 관련된 여러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 될 것으로 예상 된다. 예를 들어 규제대상은 63대 재벌에 국한할 것인가 아니면 종업원 300인 이상의 모든 대기업을 포함할 것인가? 업종 제한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만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중소기업 적격 업체를 모두 진입 규제 대상에 포함 할 것인가?

만일 재벌 진입 규제로 기존 중소기업이나 중견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증가하여 경쟁질서가 왜곡된다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중소기업의 투자도 억제해야 하는가?

현재 지방자치 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적용되는 의무 휴업제는 어느 정도 확대 되어야 할 것인가? 지방 자치 단체나 중앙정부가 물리적인 방법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진출을 억제할 수 있는 행정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가? 이 모든 의문을 해소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어야만 대기업 진입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재벌의 진입을 규제해야 하는 당위성은 인정되나 규제만으로 골목 상권을 보호할 수는 없다. 만일 재벌이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수용하여 즉 사회적인 안정이 궁극적으로는 재벌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인정 하여 자발적으로 진출을 자제 한다면 정부의 규제는 좀 더 효과 적일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 논의되기 시작한지 오래되었으나 아직도 그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정

하지 못하고 있다. 재벌은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다는 것이 재벌개혁논자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바로 이러한 권한과 책임의 괴리 때문에 재벌의 위법행위와 비도덕적 행태는 묵과되기 일쑤고 사회적인 견제에도 면역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조리와 병폐를 바로 잡으려면 기업집단법을 제정하여 재벌의 규제고삐를 한층 더 단단히 죄야 한다는 결론이다.²⁴⁾ 그러나 재벌의 위법행위는 기존 공정거래법과 다른 법으로 충분히 다룰 수 있다. 만일 규제와 법이 미흡하다면 보완하거나 개정하면 된다. 기존법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기업집단법이 제대로 운영 될 리 있겠는가?

문제는 비도덕적 행태 특히 경제력을 남용하는 불공정한 행위인데 이를 법으로 정하고 규제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바람직한가는 논쟁의 여지가 없지 않다. 무엇보다도 비도덕성의 기준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기업집단법에 포함될 기업집단을 정의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자산 5조이상의 63개 재벌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들 재벌들은 자산과 매출액 측면에서 커다란 편차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총수가 있는 4대 재벌이 10대 재벌 총매출 (2011년 기준)의 73%, 30대의 경우 60%, 그리고 63개 재벌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어느 재벌은 수출에 전문화 되었는가 하면 다른 재벌들은 내수산업을 장악 하고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재벌들을 동일한 잣대로 규제한다는 것이 가능하거나 공평한 일인지도 분명치 않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재벌의 기준도 조정되어야 한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윤리관도 바뀌게 마련이다. 기업집단법이 도덕성을 내포하는 사회적 책임을 법으로 정한다면 기업이 경제 여건의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경직성의 문제도 제기 된다.

재벌을 포함하는 대기업군의 사회적 책임을 법으로 정할 수 없다면, 좀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기업의 이해당사자, 중소기업자, 소비자, 언론, 비정부기구, 그리고 정부가 참여하여 기업 특히 대기업 집단의 사회적인 책임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고 책임 이행을 감시 할 수 있는 사회적 감시망을 구축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제도를 6.5 소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4) 재벌의 자율규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정립을 위한 위원회의 설립

(1) 자율규제

재벌 해체 논까지 거론될 정도로 재벌에 대한 여론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재벌개혁이 주요과제인 경제민주화 논의가 대선의 쟁점이 되고 있으나 재벌은 경제민주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의 방관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시민사회 비난을 받고 있다. 재벌이 개혁논의를 수용하여 책임 있는 대응을 하기 보다는 방어에만 집중한다고 하면 재벌개혁은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없을 것이며 재벌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과 공격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24) 김상조(2012, p.216)와 장하준·정승일·이종태(2012, pp.215-266)는 '기업집단법'의 제정을 통해 재벌의 경영권 안정은 보장해 주되,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한국의 재벌들은 아무리 세계시장에서 그 영역을 넓혀가는 다국적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해도 한국에 기반을 둔 한국기업이다. 국내 시장에서 비도덕적 행태로 비난을 받고 있는 재벌이 세계 시장의 어느 곳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재벌은 정치권의 개혁 공약을 인기 영합적인 공세라고 도외시하기 보다는 재벌개혁이 어느 특정 정파나 계층의 편파적인 주장에 좌우되지 않도록 개혁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즉 재벌은 첫째,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을 중요시하고 한국사회의 윤리관 도덕성을 존중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즉 재벌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를 밝혀야 한다. 둘째로, 자체적인 개혁을 추진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비도덕적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재벌내부의 감시·제제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전경련을 재벌의 이익을 대변함과 동시에 내부적인 감시·제제 기능을 겸하도록 그 조직과 역할을 재편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사회적 견제장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정립을 위한 위원회의 설립

재벌이 지금까지 축적 해 온 영향력을 쉽게 포기 할리 없다. 재벌이 계속해서 시장권력으로 군림 하려 한다면, 재벌의 자발적인 노력은 일반시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피상적인 개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만일 자발적인 노력을 기대 할 수 없다면 재벌이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정치적·사회적 감시 및 견제 장치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언론 비정부시민단체(NGO)와 기업의 이해 당사자들이 견제장치의 여러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대기업군의 사회적 견제·감시망은 하나의 독립된 기구로서 제도화·조직화 되어야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룰 정부위원회의 설립을 제안한다.

위원회는 재벌을 포함하는 대기업과 대기업의 이해당사자들 언론, 비정부기구들이

- i)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범위와 책임이행 기준을 설정하고,
- ii) 대기업의 비도덕적인 거래나 로비 사례를 점검하여 공표하고
- iii) 필요하다면 비도덕적인 행위의 시정을 공정위에 요구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건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위원회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도덕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대기업의 활동을 주기적으로 공표하여 비도덕성 여부의 판단을 여론에도 맡겨야 한다. 물론 여론의 판단이 합리적이 아닐 수도 있고 특정 이해 집단이나 계층에 의해 좌우될 수도 있다. 여론몰이의 부당한 피해를 우려한다면 재벌은 여론몰이의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체적인 규제를 강화하며 위원회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도덕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의 행동 패턴을 바꾸어나가야 할 것이다.

재벌개혁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 사회적인 책임 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i) 재벌의

자체적인 개혁을 유도하고 (ii) 재벌의 기업행태를 감시 견제 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를 구축하는 등, 간접적인 개혁을 추진하는데 있다. 물론 양보와 타협의 전통이 일천한 한국사회에서 정부위원회가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의 영역을 정하여 재벌을 개혁하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 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부인할 수 없다.

만일 위원회의 활동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간접적인 개혁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겠는가, 재벌개혁은 뒤로 밀려나면서 보수·진보의 대립은 더 격화될 것이며 만일 재벌로 경제력이 계속 집중되어 사회 안정을 위협한다면 한국사회는 진보의 보다 극단적인 주장을 받아 들여, 재벌의 분할이라는 물리적 개혁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총출제를 제한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재벌소유 지분과 기업을 매각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개혁이 사회적인 호응을 얻어 여론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물리적인 개혁도 한계가 있어 재벌의 경제력과 부당한 영향력을 억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 만일 30대 재벌에 국한하여 이 재벌들의 경제력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75%가 넘는 총매출/GDP 비율을 줄여 나가기로 한다면 어느 정도 축소해야 경제력이 분산 될 것인가? 예를 들어 50%가 충분하지 않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적정선을 결정 할 것인가?
- 재벌이 매각하는 지분과 기업을 누가 사 들일 것인가? 중견기업이 단독으로 혹은 공동으로 매입한다면 새로운 재벌이 태어 날 수도 있지 않은가? 외국인들이 사들인다면, 국민정서가 이를 허용 할 수 있는가?
- 상당수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미 재벌 계열기업의 지분을 보유 하고 있다. 재벌이 계열기업을 매각하도록 강요받는다면 이들 외국인 지분 보유자들과 주식시장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

경제력을 완화한다고 해서 재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만일 재벌의 위법 불공정 행위를 억제·견제할 수 있는 사회적인 풍토가 조성되지 않는다면 재벌의 행태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물리적인 개혁에는 여러 리스크가 따를 수 있다는 위험을 인지한다면, 즉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경제력 분산의 한계를 이해한다면 정치권은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간접적인 재벌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7. 한국의 자본주의 진로는?

한국 자본주의 체제는 유럽의 사회적 시장 경제 제도와 비교하여 볼 때, 복지보다는 효율에 무게를 둔 혼합경제의 제도로 특징지을 수 있다. 2007 년 이후 금융위기와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혼합경제제도는 (i) 시장의 자기조절 기능 약화, (ii) 금융의 불안정성과 도덕적

해이, (iii) 기업 특히 재벌의 윤리 경영의 결여에 따른 시장경쟁 질서의 왜곡, 그리고 (iv) 보편적인 복지 제도 미비에 따른 소득의 불균등한 배분 등의 여러 구조적인 결함을 노출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구조적인 취약점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한국에 맞는 새로운 제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1) 외국의 체제와 한국경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정부의 역할과 정책 목표로서 형평과 효율의 상대적 중요성에 따라 여러 다양한 형태로 구분된다. 극우에 속하는 자유방임적인 시장경제 제도가 있는가 하면 이와 극을 달리하여 정부가 자원배분과 상업적 경제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중국식 국가 자본주의도 있다. 유럽의 사회적 시장 경제 체제도 북구형, 대륙형, 그리고 지중해 형으로 구분된다. 여기에 사회적 시장 체제의 변형된 제도를 포함하면 시장제도는 더욱 더 다양해진다.

기존체제중의 하나를 모방 한다면 어느 제도를 선택 할 것인가? 예를 들어 북구의 사회적 시장 경제 체제가 가장 효율적이며 분배의 정의도 구현할 수 있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성공할 수 있었던 북구의 특수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여건이 있다. 북구의 여건이 다른 경제로 쉽게 이식 될 리 없다. 북구 제도를 한국에 접목할 수 도 없으며, 한다고 하더라도 뿌리를 내리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한 것이 한국사회가 50%가 넘는 북구의 조세부담율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제도로도 변화를 거듭하여 가는 과정에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여건에 부합하는 새로운 제도를 발전 시켜 나갈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제도가 정치와 경제를 포함하는 문화의 산물임을 고려한다면 새로운 제도는 진화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단기간에 급조될 수는 없다.

2) 자본주의 시장제도의 개편 방향

한국의 혼합경제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대부분의 자본주의 제도가 안고 있는 공통적인 결함이다. 다만 한국의 경우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정부를 포함하는 여러 경제 주체간의 힘의 균형을 왜해시켜 혼합경제 제도의 효율성이 더 크게 악화 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기 보다는 현행제도의 정상적인 작동을 제한하는 요인들을 규명하여 재벌주도형으로 변질되고 있는 혼합경제제도를 자유시장 중심체제로 전환시키는 현행제도의 보완·개편이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떠한 개혁이 뒤따라야 한국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다시 정상궤도에 오를 것인가? 경제의 양극화 이면에는 정치와 이념의 양극화가 자리 잡고 있다. 보수와 진보간의 대립이나 세대간의 분열은 그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어느 정당이 집권하던 2013년에 출범하는 신정부는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안정적인 정치기반을 확보할 수 없어 신정부의 개혁 역량은

극히 제한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로 이 때문에 여러 개혁 제안이 특히 근본적인 개혁일수록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사회전반에 걸친 개혁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정치적인 제약을 고려한다면 자본주의 시장체제의 개혁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개혁부터 시작하여 시장 제도를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이다. 5,6절의 분석을 토대로 그 실현 가능한 제안을 요약해보면,

- i) 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보편적인 복지제도의 개편은 현 제도의 단순화 · 체계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정치권은 복지지출의 규모는 재정 건전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 ii) 금융제도개혁은 금융시장, 기관, 상품의 단순화를 추진하여 금융부분에 대한 투자의 증가를 억제하며 감독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 한다.
- iii) 앞으로 재벌이 외국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새 기술도 도입하고 외국인 기술자, 외국인 경영자들도 영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상속세 제도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재벌 가족의 영향력이 감소하여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소유도 분산되는 등 재벌의 지배구조도 진화하여 근대화 · 합리화 될 것이다. 따라서 재벌개혁은
 - 재벌의 비대를 억제하기 보다는 재벌이 법과 정의를 무시하는 풍토를 개선 할 수 있는 사회 개혁이 병행 되어야 한다. 특히 감독 기구의 정치적인 독립성을 보장하며 투명하고 책임의 소재가 명확한 운영체제를 확립 한다.
 - 기업 특히 대기업집단의 사회적인 책임의 범위와 한계를 명백히 하고 책임 이행을 감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기 위해 비정부시민기구, 언론,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기업의 이해 당사자들로 구성되는 정부위원회 형태의 사회적 감시망을 설립 한다.
 - 대기업집단의 자체적인 개혁을 유도한다. 대기업집단은 전경련을 재벌의 내부감시기구로 그 역할을 조정하는 등의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만일 간접적인 재벌 감시 · 견제 정책이 재벌의 행태를 개선하지 못하여 재벌로의 경제력이 계속 집중된다면 재벌의 소유 · 경영의 분리, 소유의 다변화, 그리고 재벌의 분할과 매각 등의 극단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여론이 개혁을 주도할 것이다. 그러나 물리적인 개혁이 수반할 여러 위험들을 고려한다면 재벌분할은 최후의 대안으로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 iv) 중소기업 보호 개발 정책은 교역재 · 비교역재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교역재 부문의 경우 시장원리에 따라 중소기업의 진입 · 퇴출을 자유롭게 하며 경쟁력이 없어 퇴출되는 기업의 회생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과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지원 한다.
 - 비교역재 부문의 경우 사회적인 안정을 위해 중소 · 영세기업을 보호 · 지원하여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시장여건을 조성한다. 사업조정제도를 강화하여 대기업의 내수서비스 부문의 투자와 사업 확장을 억제한다. 만일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이 계속 증가하는 경우 사업조정제도를 강화하고 독과점규제를 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한다.

끝으로 재벌개혁을 누가 주도해야 할 것인가? 논리적으로는 당연히 입법부와 정부가 주체가 되어 개혁의 틀을 잡아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문제는 주체가 되어야 할 입법, 행정, 사법부 모두가 개혁 대상이 되고 있다는 데 있다. 정치권과 정부는 재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여 재벌 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끌어 내지 못 할 것이다.

설사 개혁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냉소적 반응과 재벌의 무관심이 만연되어 있는 사회적 풍토가 바뀌지 않는 한 정부의 노력은 실효를 견을 수 없을 것이다.

만일 국민의 폭넓은 지지와 신뢰를 받는 정권이 탄생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 새 정부는 재벌 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감독·사정 기관을 통치수단으로 이용하는 과거의 폐습에서 벗어나 이들 기관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립하고, 대기업 집단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보수를 지급하여 직원들의 현직·은퇴 후의 경제적인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 감독기관은 정치적인 압력으로부터는 자유로워야 하나 독립성의 남용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정부는 이들 기관의 정책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책임소재가 분명한 합리적인 경영이 정착 될 수 있도록 제제를 개편·정비해야 할 것이다.

8. 맺음말

혼합경제제도의 개편은 복지를 확대하고 소득불균등을 개선하며, 재벌의 경제력 남용을 차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 연구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는 더 불균등 해졌으나 최근에는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분배보다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 재벌의 팽창이 빈부격차를 확대한 개연성은 있으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도 없다.

재벌들의 팽창을 억제하는 길만이 재벌을 순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비대를 견제한다고 해서 재벌의 근본적인 행태가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입법취지대로 법을 운영하여 재벌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재벌의 자율적인 규제를 유도하며, 사회적인 견제장치를 구축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여·야 모두 경제민주화로 시장제도를 개혁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제 민주화가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한국의 혼합경제 자본주의는 여러 측면에서 그 구조를 바꾸어 갈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2~3년이 개혁의 적기인지는 분명치 않다. 2013년에 출범할 새 정부의 개혁 역량도 극히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현실적인 개혁 공약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실현가능한 개혁 공약도 자초된다는 과거의 경험을 교훈삼아 정치권은 개혁 경쟁을 자제하

여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 연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진단정보포털 오픈니(<http://groupopni.ftc.go.kr/>).

공정거래위원회 (2012), “공정위,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63개 지정,” 보도자료(2012.4.13.).

공정거래위원회 (2012),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현황 정보공개,” 보도자료(2012.2.28.).

공정거래위원회 (2012),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 분석결과,” 보도자료(2012.8.).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wnsearch/totalSearch.jsp>).

김낙년 (2012), “한국의 소득집중도 추이와 국제비교, 1976-2010: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Working Paper 2012-03, 낙성대경제연구소.

김동원 · 조명현 · 안수현 · 이현수 (2012), “금융감독 운영체계 선진화방안,” 미발표 연구자료.

김득의 (2012.9.12), “재벌총수 솜방망이 처벌? 사법정의 위해 엄벌해야,” 시민사회신문.

김병권 (2012),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논쟁,”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김상조 (2012), “중흥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북.

김영신 (2011), “동반성장지수 및 초과이익공유제의 개념적 오류와 문제점,” KERI insight 11-06, 한국경제연구원.

김주훈 (2012),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에 관한 해석,” KDI focus, 한국개발연구원.

변양규 · 설 윤 · 유진성 · 김영신 · 임병화 · 최남석 · 이소영 · 김창배 · 신석훈 (2012), “양극화 논쟁, 그 오해와 진실,” 한국경제연구원.

설 윤 (2011), “가구 특성별 양극화의 추이와 시사점,” KERI insight 10-02, 한국경제연구원.

안종범 (2011), “한국형 복지모형과 복지재정,” 『응용경제』, 제13권 제2호.

안철수 (2012), “안철수의 생각,” 김영사.

위평량 · 김우찬 (2011), “국내 재벌그룹 팽창에 관한 분석과 그 대응방안 모색,” 경제개혁리포트, 2011-06호.

유경준 (2007), “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7-05, KDI.

유경준 (2012),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KDI focus, 한국개발연구원.

이재형 · 양정삼 · 이상무 (2011), “시장구조조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2011-10, KDI.

임성은 (2011), “최근의 소득 양극화 추이 분석,” 보건 · 복지 Issue&Focus 제100호 (2011-3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북일보 (2012.9.13), “대기업 불공정 거래행위 처벌 강화하라.”

조윤제 외 (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의 변화,” 한국은행.

조윤제 (2009), “한국의 권력구조와 경제정책,” 한울 아카데미.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관련통계』, 2011.8.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8월 자료, 각 연도.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잠정)의 주요내용』, 각 연도.

황인학 (2012), “2012년 대기업 집단 정책의 쟁점과 과제,” KERI insight 12-04, 한국경제연구원.

- Cecchetti, Stephen G. and Enisse Kharroubi (2012), "Reassessing the Impact of Finance on Growth," BIS Working Papers No 381,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July.
- Esteban, J.M., C. Gradin, and D. Ray (1999), "Extensions of a Measure of Polarization with an Application to the Income Distribution of Five OECD Countries," Working Paper No. 218, Maxwell School of Citizenship and Public Affairs, Syracuse University, 1999.11.
- Jeong, Hyung-Kwon (2009), "The Procyclicality of Bank Lending and its Funding Structure: The Case of Korea," A Paper Presented to the 2009 BOK International Conference "The Credit Crisis: Theoretical Perspectives and Policy Implications," May.
- Kim, Jun Kyung (2010), Expansion of Consumer Credit and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Wealth," Unpublished Manuscript, KDI.
- Park, Jung Soo and Yung Chul Park (2011), "Financial Liberalization and Income Distribution in Korea: Evidence from Household Data," *Unpublished Manuscript*.
- Park, Jung Soo and Yung Chul Park (2011), "The Quality Effect: Does Financial Liberalization Improve the Allocation of Capital?," *Unpublished Manuscript*.
- Morck, Randall (2009), The Riddle of the Great Pyramids. In Asli M. Colpan & Takashi Hikino, eds. The Oxford Handbook of Business Groups. Oxford University Press.
- Sandel, Michael J. (2009),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Farrar, Straus and Giroux, New York.
- Sandel, Michael J. (2012), "What Money Can't Buy—the Moral Limits of Markets," Farrar, Straus and Giroux, New York.
- Stiglitz, Joseph E. (2012), "The Price of Inequality," W.W. Norton & Company.

<부록 1> 대기업집단의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 추정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표하는 기업집단 자료에는 부가가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기업집단 소속 비금융보험계열사의 부가가치를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추정하였음.

첫째, 2001~2011년의 기간 동안 종사자규모 500인 이상 광업·제조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출하액 대비 부가가치 비율을 계산함(<부표 1> 참조).

- 2009년까지는 실제치를 이용하고, 2010~2011년은 추정치를 활용하였음.
- 2010~2011년 종사자규모 500인 이상 광업·제조업 사업체의 출하액 대비 부가가치 비율 추정치는 이재형 외(2011, p.50)의 결과(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364개 비금융보험계열사²⁵⁾ 대상 출하액 대비 부가가치 비율)와 같은 기간 동안 ‘국민계정(잠정)’상의 총산출 대비 부가가치의 비율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음.
- 이를 위해 2007~2009년의 기간 동안 대규모 기업집단 출하액 대비 부가가치 비율(y_t)을 ‘국민계정(잠정)’상의 총산출 대비 부가가치의 비율(x_t)에 대해 회귀분석하였음.
- 그 결과 $\hat{y}_t = 0.8194 \times x_t$ 의 회귀방정식을 추정할 수 있었음(조정된 $R^2 = 1.0$).
- 즉 대규모 기업집단 출하액 대비 부가가치 비율(y_t)은 ‘국민계정(잠정)’상의 총산출 대비 부가가치의 비율(x_t)과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추정됨(x_t 의 추정치 0.8194의 t값은 260.2로 유의수준 1%에서 동 추정치가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함).
- 이러한 회귀방정식을 이용하여 2010~2011년 대규모 기업집단 출하액 대비 부가가치 비율(\hat{y}_t)을 추계하였고, 이를 같은 기간 동안 종사자규모 500인 이상 광업·제조업 사업체의 출하액 대비 부가가치 비율로 간주하였음.
- 왜냐하면 2007~2009년의 기간 동안 대규모 기업집단 출하액 대비 부가가치 비율과 종사자규모 500인 이상 광업·제조업 사업체의 출하액 대비 부가가치 비율은 유사한 값을 나타내기 때문임.

둘째, 2001~2011년의 기간 동안 기업집단 소속 비금융보험계열사의 매출액에 종사자규모 500인 이상 광업·제조업 사업체의 출하액 대비 부가가치 비율을 적용하여 대규모 기업집단의 부가가치를 추정함.

25) 2010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대규모 기업집단 53개 소속 계열사 1,264개사 가운데 비금융보험계열사는 1,166개사에 이르고 있다. 이재형 외(2011, p.49)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공개시스템에 공시되어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의 법인등록번호를 활용하여 광업·제조업 통계의 사업체 데이터와 연계시킨 결과,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364개 계열사를 확인하였다. 이들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의 업종은 제조업 이외 건설업 등 전산업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반면, 광공업 자료의 경우 광업과 제조업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분석대상이 되는 기업은 전체 계열사 중 광업과 제조업에 속하는 일부 소속기업들에만 한정된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부표 1> 2010~2011년 대규모 기업집단 출하액 대비 부가가치 비율 추정 절차

(단위: %)

구분	광업 및 제조업[전국사업체조사]				부가가치/출하액 [이재형외(2011)]		부가가치/총산출 [국민계정(잠정)] (x_t)	부가가치/출하액 [대규모 기업집단 추정치](\hat{y}_t)
	계	300인미만	300~499인	500인이상	광업·제조업 전체	대규모 기업집단 (y_t)		
2001	38.1	39.9	37.3	36.8			41.6	
2002	38.5	39.1	36.4	38.2			42.1	
2003	38.1	39.6	35.5	37.1			44.6	
2004	38.4	39.1	36.7	37.9			43.0	
2005	37.0	38.6	35.1	35.8			42.5	
2006	36.0	37.7	38.0	34.6			41.3	
2007	34.9	36.7	32.5	33.9	34.9	33.2	40.8	33.5
2008	33.1	35.5	31.6	31.7	33.1	31.4	38.1	31.2
2009	33.4	36.1	30.6	31.9	33.4	31.7	38.6	31.6
2010							38.2	31.3
2011							36.6	30.0

주: 2010~2011년 대규모 기업집단 출하액 대비 부가가치 비율(\hat{y}_t)은 $\hat{y}_t = 0.8194 \times x_t$ (t값:243)의 회귀방정식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음. 동 회귀방정식은 2007~2009년의 기간 동안 대규모 기업집단 출하액 대비 부가가치 비율(y_t)을 '국민계정(잠정)'상의 총산출 대비 부가가치의 비율(x_t)에 대해 회귀분석한 결과임.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연도에서 재편·가공.

이재형·양정삼·이상무, 『시장구조조사』, 한국개발연구원, 2011.10, p.50.

한국은행, 『국민계정(잠정)의 주요내용』, 각 연도.

<부표 2>와 <부록그림 1>은 위의 절차를 통해 추정한 대규모 기업집단의 부가가치에 근거하여 2001년부터 2011년의 기간 동안 비금융보험계열사를 대상으로 기업집단 유형별 명목 GDP 대비 부가가치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정리한 것임.

<부표 2> 기업집단 유형별 명목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 추이(비금융보험회사)

(단위: %)

year	전체 기업집단	민간 기업집단	총수있음				총수없음	공기업
			총수있음	4대	10대	30대		
2001 [A]	28.8	25.6	23.1	14.8	19.6	23.0	2.5	3.2
2002	29.6	26.5	23.9	15.4	19.7	23.3	2.6	3.1
2003	25.2	22.3	19.5	12.4	15.5	18.9	2.8	2.9
2004	28.8	25.8	23.6	13.2	18.4	22.7	2.2	3.0
2005	28.8	25.9	23.4	12.8	17.8	22.3	2.4	3.0
2006	29.0	26.0	22.3	12.4	16.9	21.2	3.7	3.0
2007	29.9	26.7	23.0	12.0	16.7	21.3	3.7	3.2
2008	31.2	27.8	23.5	13.2	18.5	23.5	4.3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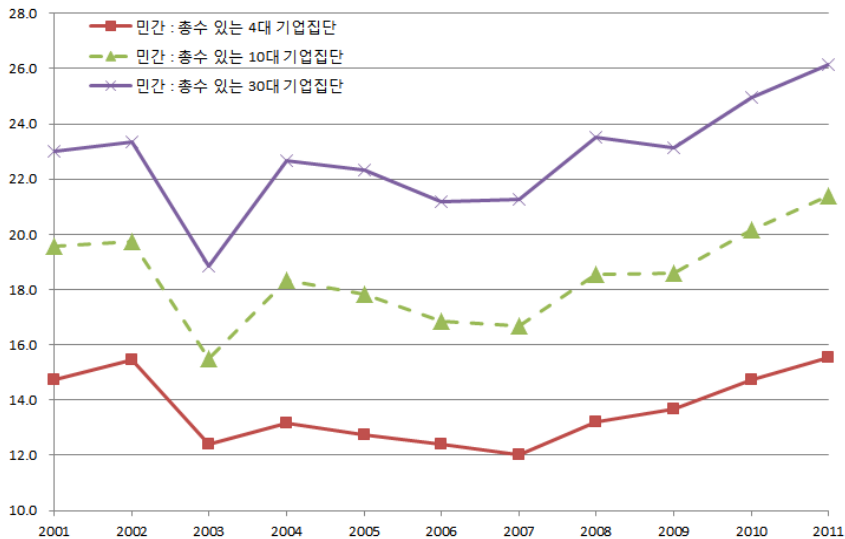
2009	30.6	27.7	23.5	13.7	18.6	23.1	4.2	2.9
2010	33.2	30.1	25.6	14.7	20.2	25.0	4.5	3.1
2011[B]	35.5	31.9	27.3	15.5	21.4	26.2	4.5	3.6
B/A				1.1	1.1	1.1		
02-07연평균 변동률				-2.9	-1.9	-0.6		
08-11연평균 변동률				6.6	6.5	5.4		

- 주: 1) 기업집단의 부가가치는 매출액에 종사자규모 500인 이상 광업·제조업 사업체의 출하액 대비 부가가치 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한 것임.
 2) 기업집단 매출액은 2011년까지는 국내회계기준(K-GAAP)을 따른 반면, 2012년부터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하여 산정된 것임.
 3) 종사자규모 500인 이상 광업·제조업 사업체의 출하액 대비 부가가치 비율은 2009년까지는 실제치, 2010~2011년은 추정치임.
 4) 전체 기업집단, 민간 기업집단, 공기업 집단 수는 연도별로 상이하며, 4대, 10대, 30대 기업집단은 당해 연도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선정된 것임.

자료: 명목GDP는 통계청(<http://kosis.kr/>), 기업집단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보포털 오픈니(<http://groupopni.ftc.go.kr/>).

<부록그림 1> 기업집단 유형별 명목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 추이(비금융보험회사)

(단위: %)



<부표 3> 1990년 이후 우리나라 전체 가구소득 대상 지니계수 및 양극화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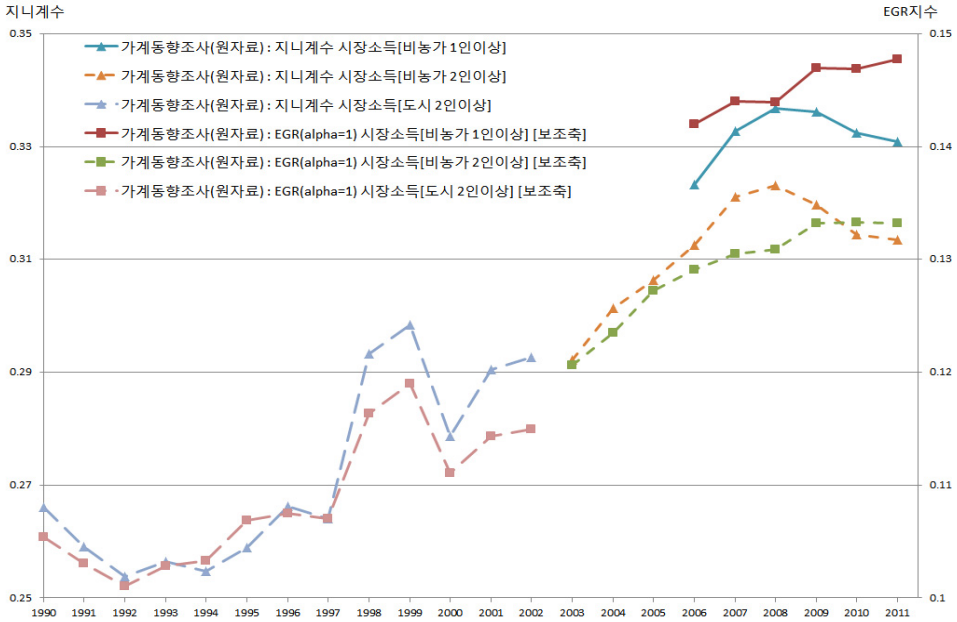
연도	지니계수		EGR지수($\beta=1$)			
			$\alpha=1.0$		$\alpha=1.5$	
	비농가 1인이상	도시/ 비농가 2인이상	비농가 1인이상	도시/ 비농가 2인이상	비농가 1인이상	도시/ 비농가 2인이상
1990		0.266		0.1054		0.0424
1991		0.259		0.1031		0.0415
1992		0.254		0.1010		0.0403
1993		0.256		0.1029		0.0410
1994		0.255		0.1033		0.0412
1995		0.259		0.1069		0.0429
1996		0.266		0.1075		0.0434
1997		0.264		0.1070		0.0429
1998		0.293		0.1163		0.0468
1999		0.298		0.1190		0.0478
2000		0.279		0.1111		0.0445
2001		0.290		0.1143		0.0458
2002		0.293		0.1149		0.0461
2003		0.292		0.1206		0.0482
2004		0.301		0.1235		0.0495
2005		0.306		0.1272		0.0512
2006	0.323	0.312	0.1420	0.1291	0.0579	0.0520
2007	0.333	0.321	0.1440	0.1305	0.0585	0.0525
2008	0.337	0.323	0.1439	0.1308	0.0587	0.0526
2009	0.336	0.320	0.1469	0.1332	0.0598	0.0536
2010	0.332	0.314	0.1469	0.1333	0.0598	0.0537
2011	0.331	0.313	0.1478	0.1332	0.0599	0.0535

주: 1) 가계동향조사(구 도시가계조사)는 2002년까지 도시가구만을 대상으로 조사되었고, 2003년부터 전국 비농가가구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2005년까지는 2인 가구 이상, 2006년부터는 1인 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음. 가계동향조사 지니계수는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을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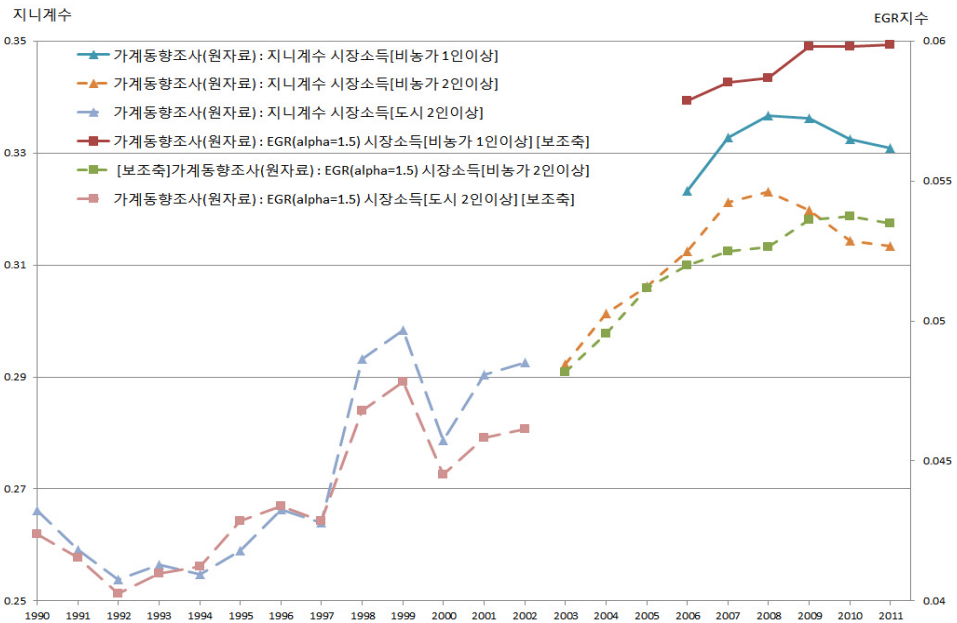
2) 가구소득은 당해 연도 가구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산출한 균등화된 연간가구소득 기준이며(균등화소득), 소득분배지표(지니계수) 산출을 위해 가구 가중치에 가구원수를 곱하여 개인(인구)단위 지표로 전환하였음(소득개인화).

3) EGR지수를 구할 때 $\beta=1$ 로 설정하였음.

<부록그림 2> 지니계수와 양극화지수(EGR지수)의 추이($\alpha=1.0$)



<부록그림 3> 지니계수와 양극화지수(EGR지수)의 추이($\alpha=1.5$)



<부록 2> 순환출자와 상호출자의 차이

○ 상호출자금지제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상호출자란 회사간에 주식을 서로 투자하고 상대회사의 주식을 상호 보유하는 것을 말함.

적용대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특정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함.

주요 내용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상호간에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금지

필요성

- 상호출자는 자본충실의 원칙을 저해하고 가공의결권을 형성하여 지배권을 왜곡되는 등 기업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해치는 악성적 출자형태임.
- 상호출자금지제도는 건전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유지의 전제가 되는 준칙(rule)의 성격을 지님.

위반시 제재

- 시정조치, 위반금액의 10%이내 과징금 부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순환출자²⁶⁾

3개 이상의 회사가 순환식으로 엮여 상호출자 효과를 내는 것을 말함.

A→B→C→A의 형태로 출자하는 방식이며, 우리나라는 자산합계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계열사 간 상호 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의 상호출자(A↔B)를 금지하고 있으나, 순환출자는 금지한 적이 없음.

- 2012년을 대상으로 할 때 순환출자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집단은 총 15개로 지난해보다 1개 감소했으며 모두 총수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해당함.

단핵구조(1개 핵심회사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출자고리가 연결)가 가장 많음.

나머지는 다핵구조(뚜렷한 핵심회사 없이 다수의 계열사가 연결) 또는 단순 삼각구조(3개 계열사만 연결) 형태임.

26) 2012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및 소유지분도에 대한 정보공개(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2.6.29).

<부표 4> 순환출자구조 유지 기업집단 현황(2012년)

구 분	집 단 명	집단수
단핵구조 (핵심회사)	「삼성」(삼성에버랜드), 「롯데」(롯데쇼핑), 「한진」(한진), 「한화」(한화), 「동부」(동부건설), 「영풍」(영풍), 「동양」(동양), 「현대산업개발」(현대산업개발)	8개
다핵구조	「현대자동차」, 「현대」, 「현대백화점」	3개
단순 삼각구조	「현대중공업」, 「대림」, 「하이트진로」, 「한라」	4개

- 공기업집단, 지주회사 전환집단 이외 대부분 집단에서 수평·방사형 출자 등 다양한 출자형태가 존속하고 있으며, 일부 집단의 경우 환상형 순환출자구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음.
아울러 총수가 기업집단 전체 계열사의 경영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영역을 잠식하거나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가능성 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소유지분구조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대기업집단의 자율시정 압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 있음.

<부록 3> 재벌의 비도덕성 관련 기사

○ 범죄 및 처벌사례²⁷⁾

1990년 이후 자산기준 10대 재벌 총수 가운데 7명이 총 22년6개월의 징역형 판결을 받았으나 모두 집행 유예로 솜방망이 처벌만 받았음(재벌닷컴에서 인용).

당연히 실형이 없어 감옥에는 가지 않았고 ‘사회봉사’ 활동 등으로 대체되었음.

더욱이 재벌총수들은 집행유예 된 처벌마저도 예외 없이 사면 받았으며, 사면받기까지 걸린 시간도 고작 285일에 불과했음.

<부표 5> 주요 재벌총수 범죄 및 처벌사례

재벌총수	범죄혐의	판결내용	기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탈세 • 배임 1천 128억원 조세포탈 등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특별사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횡령 • 배임 횡령 693억원, 비자금 1천억원대 조성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특별사면
최태원 (SK그룹 회장)	분식회계 • 부당내부거래 분식회계 1조 5천억여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특별사면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횡령 • 분식회계 횡령 289억원, 분식회계 2,797억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특별사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폭행 ‘아들보복 폭행사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5년	특별사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횡령 비자금 1,161억원 조성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특별사면

자료: 김득의, “재벌총수 솜방망이 처벌? 사법정의 위해 엄벌해야”, 『시민사회신문』, 2012.9.12.(<http://www.ingopress.com/>).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1996년 8월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지만 402일만에 사면을 받았음.

또한 삼성특검으로 2009년 8월에 배임 • 조세포탈 사건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심지어 대법원에서 유죄 파기환송되어도 형량은 바뀌지 않았고, 이 회장은 139일만에 특별사면을 받았음.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사건으로 2008년 6월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선고 받았고 73일만에 사면됐음.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조5천억원대의 SK글로벌 분식회계로 2008년 5월에 ‘징역 3년 집행유

27) 김득의, “재벌총수 솜방망이 처벌? 사법정의 위해 엄벌해야”, 『시민사회신문』, 2012.9.12.(<http://www.ingopress.com/>).

에 5년’을 선고 받았고 78일만에 사면을 받았지만, 현재 수백원대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음.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마찬가지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음.

재벌총수들의 범죄는 하나같이 집행유예 그리고 대통령의 특별사면까지 받았고, 이로 인해 지난 20년간 재벌총수들은 단 한명도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

○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기사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은 2012년 7월 25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 10대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현황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를 촉구했음.²⁸⁾

현대자동차나 SK, LG화학 등 재벌들에게 최근 5년 동안 부과된 공정위 과징금은 64건에 1조 원이지만 관련 매출액은 총 119조원에 달해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이 0.9%에 불과하다고 지적함.

구체적으로 불공정거래가 31회나 적발된 삼성은 28조원의 부당매출을 올렸지만 과징금은 2457억원(0.9%) 수준이고, 현대자동차도 17조원의 부당매출을 올렸지만 과징금은 1,035억원(0.6%)에 불과하다고 지적.

공정위가 소송에서 패소한 건수도 22건(34%)이나 되고, 해당 과징금 992억원 가운데 622억원을 되돌려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

28) “대기업 불공정 거래행위 처벌 강화하라”, 『전북일보』, 2012.9.13.(<http://www.jjan.kr/>).

<부록 4> 광업·제조업 분야 부가가치 비중 추이

<부표 6> 광업·제조업 분야 기업규모별 명목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광업 및 제조업 부가가치						명목GDP
	계	300인 미만	300인 이상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1999	202 (36.8)	82 (14.9)	120 (21.9)	10 (1.8)	19 (3.5)	90 (16.5)	549 (100.0)
2000	221 (36.6)	93 (15.4)	128 (21.2)	12 (2.0)	22 (3.7)	94 (15.5)	603 (100.0)
2001	223 (34.2)	98 (15.0)	125 (19.2)	11 (1.7)	23 (3.5)	91 (14.0)	651 (100.0)
2002	244 (33.8)	108 (14.9)	136 (18.9)	14 (1.9)	27 (3.7)	96 (13.3)	721 (100.0)
2003	257 (33.5)	116 (15.1)	141 (18.4)	13 (1.6)	27 (3.5)	102 (13.3)	767 (100.0)
2004	303 (36.7)	129 (15.6)	175 (21.1)	16 (2.0)	30 (3.7)	128 (15.5)	827 (100.0)
2005	314 (36.3)	138 (16.0)	176 (20.4)	16 (1.9)	30 (3.5)	130 (15.1)	865 (100.0)
2006	328 (36.1)	144 (15.8)	185 (20.3)	17 (1.9)	32 (3.5)	135 (14.9)	909 (100.0)
2007	331 (33.9)	135 (13.8)	196 (20.1)	19 (1.9)	31 (3.2)	146 (15.0)	975 (100.0)
2008	369 (36.0)	146 (14.3)	223 (21.7)	21 (2.0)	33 (3.2)	170 (16.5)	1,026 (100.0)
2009	376 (35.3)	156 (14.6)	221 (20.7)	19 (1.8)	30 (2.8)	172 (16.2)	1,065 (100.0)

주: 괄호() 안은 당해 연도 명목 GDP에서 광업·제조업 분야 기업규모별 부가가치액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통계청(<http://kosis.kr/>) 및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연도에서 재편·가공.

<부표 7> 광업·제조업 분야 기업규모별 부가가치 비중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광업 및 제조업 부가가치											
	계		300인 미만		300인 이상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1999	202	(100.0)	82	(40.6)	120	(59.4)	10	(5.0)	19	(9.6)	90	(44.8)
2000	221	(100.0)	93	(42.2)	128	(57.8)	12	(5.4)	22	(10.1)	94	(42.4)
2001	223	(100.0)	98	(43.9)	125	(56.1)	11	(5.1)	23	(10.3)	91	(40.8)
2002	244	(100.0)	108	(44.1)	136	(55.9)	14	(5.7)	27	(11.0)	96	(39.2)
2003	257	(100.0)	116	(45.1)	141	(54.9)	13	(4.9)	27	(10.3)	102	(39.7)
2004	303	(100.0)	129	(42.4)	175	(57.6)	16	(5.4)	30	(10.0)	128	(42.3)
2005	314	(100.0)	138	(43.9)	176	(56.1)	16	(5.1)	30	(9.5)	130	(41.4)
2006	328	(100.0)	144	(43.8)	185	(56.2)	17	(5.3)	32	(9.7)	135	(41.2)
2007	331	(100.0)	135	(40.8)	196	(59.2)	19	(5.7)	31	(9.4)	146	(44.2)
2008	369	(100.0)	146	(39.6)	223	(60.4)	21	(5.6)	33	(8.9)	170	(45.9)
2009	376	(100.0)	156	(41.3)	221	(58.7)	19	(5.0)	30	(8.0)	172	(45.7)

주: 괄호() 안은 당해 연도 광업·제조업 전체 부가가치에서 기업규모별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통계청(<http://kosis.kr/>) 및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연도에서.

Capitalism and the Korean Economy: Issues and the Prospect

Yung Chul Park (Korea University)

Abstract

Korea's economic system prior to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is characterized as one in which the government plays a leading role in allocating resources. The objective of economic liberalization and opening undertaken after the crisis was to foster a market oriented economic system. In the process of market liberalization, however, Korea has seen a marked deterioration of income distribution and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n the hands of major industrial groups (the chaebol). Contrary to the expectation, there is no evidence that financial liberalization has contributed to stability of the economy or improvements in the allocation of resources, although it has played a part in worsening distributive equity. In the future the reform of the capitalist market system needs to focus on improving income distribution through a revamping of the welfare system and soundness and st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 and controlling the abusiveness of the chaebol's economic power. More specifically, this paper proposes structural reforms aiming at (i) simplification of the financial system, (ii) a welfare policy that observes the financial constraint, (iii) an agreement on the scope and methods of enforcemen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mong corporations, their stakeholder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other civic organizations, and the press, and (iv) creation of a social surveillance network monitoring the activities and self-reform of large industrial groups.